

유
네
스
코

미
래
담
론

연
구

전상인 김두환 박범순 한준 박남기 백영연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기획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집필자의 의견은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미래담론' 연구

전상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두환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범순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한 준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남기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백영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목 차

총론	1
교육	15
과학	51
문화	71
커뮤니케이션	119
요약 및 결론	147
참고문헌	150

I. 총론

전상인

1. 들어가는 말

지구상에서 인류는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생명 종(種)이다. 이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 없이 ‘현재’를 살아갈 뿐인 다른 생명체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 오랫동안 인류의 조상도 그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인간은 미래와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진화생물학자인 다니엘 밀로(Daniel S. Milo, 201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화 과정에서 인류는 한때 멸종 위기에 빠졌다. 뇌가 비약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뇌 부피 증대는 불의 통제, 언어적 소통, 도구 이용 등의 측면을 볼 때 인류의 강점이었다. 하지만 뇌의 과도한 성장은 인류에게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난산(難産), 유년기의 장기화를 유발하면서 집단 생존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편, 뇌의 지나친 성장은 인간을 상상과 망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다. 게다가 각자의 역할 분업을 통해 인간은 뇌의 뉴런(neuron)을 쉬게 만들 수도 있었다. 5만 8천 년 전 멸종 직전의 인간들이 아프리카의 풍요로운 소말리아 반도를 떠나 지구 전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내일 보자’라는 말은 이때 생겨났으며, 이와 같은 ‘미래의 발명’은

오직 인간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었다. 궁극적으로 인류는 지구의 지배종이 되어 있다. 하지만 내일 혹은 미래가 반드시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내일이 기다려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일이 두렵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싫든 좋든 인간과 미래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미래를 의식하는 일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공히 벌어진다. 미래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미신이나 주술, 신앙 등의 영역에 속해 왔지만, 근대 이후 학문이나 과학의 영역에서도 미래연구는 나름의 전통과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래연구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왔다. 첫째는 사회학의 출현이다. 사회학은 18-9세기 급격한 사회 변동의 산물이자 사회적 위기감에 대한 지적 대응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학의 창시자 콩트(Auguste Comte)는 “예견하기 위해 관찰하고, 예방하기 위해 예견한다(Voir pour prévoir, prévoir pour prévenir)”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둘째 단계는 ‘계획학’(planning studies)의 태동이다. 근대 공리주의 국가(utilitarian state)의 성립과 근대화 프로젝트의 세계적 확산 및 경쟁, 그리고 이를 위한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 이데올로기의 득세는 20세기 들어 공공계획의 전성기를 초래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미래연구는 계획학의 이름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었다. 계획학이 주도한 미래연구는 다분히 국가 주도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야심적 미래 만들기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스콧, 2010).

미래연구의 세 번째 단계는 1970년 전후에 시작된 명실상부한 ‘미래학’(futurology, future studies)의 발전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적 흐름이 있었다. 먼저 1960년대에 전략연구가 허만 칸(Hermann Kahn)은 미래학 분야를 개척했다. 최초의 미래학 연구집단 로마클럽(Roman Club)은 1972년에 산업문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견한 <성장의 한계>를 발표했다. 1970-80년대는 미래학이 널리 대중화되는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정보화 시대를 배경으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과 <미래의 충격>을 저술했고, 글로벌 경제체제의 심화에 주목한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메가트렌드>를 출간했다. 이후 제임스 데이터(James Dator) 등에 의해 미래연구의 학문적 내실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21세기 초 현재 시점에, 우리는 왜 다시 미래를 말하는가? 왜 유네스코가 미래를 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의 소산이다. 우선 오늘날은 인류 문명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팬데믹의 창궐, 만성적 경제 저성장, 전쟁의 공포, 민주주의의 불안정, 사회 양극화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덩달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부정적 미래관이 넘쳐나고 있다. 근대 이후의 진취적 계몽주의나 진보적 역사관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향해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유네스코의 태생적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래연구의 네 번째 발전단계라고 명명(命名)해도 좋을 것이다. 그 출발이 바로 ‘미래문해’(futures literacy) 개념이다. 이와 같은 미래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한국의 발전 경로 또는 시행착오의 경험은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전제다.

이 보고서는 미래문해력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한국의 미래가 주요 관심이나, 이는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향후 30년 정도로 상정했다. 먼저 유관 전문가들이 교육과 문화, 과학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각각 어떤 변화를 예상하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통의 한국인이 해당 영역의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적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설문조사 문항 초안을 제안했다. 만약 후속 연구로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미래문해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외국의 미래문해 현황과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현재와 같은 복합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삶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미래교육의 핵심적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래교육의 초점은 ‘학습자의 삶’에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 간 협업이 관건이 되고 또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화 영역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의 동인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생명연장 등이, 사회경제적 측면의 동인으로서 지구화의 심화, 저출산 및 인구감소, 사회·경제적 양극화, 다양한 정체성, 민주주의의 위기 등을 미래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전망했다. 과학 분야의 경우,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생명이나 인권, 정체성 등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다양한 이슈들, 인간-기계의 관계, 인간-자연의 관계,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및 국가 간 불평등 문제 등이 미래문해의 핵심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미디어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것이 초래할 정보·지식격차 문제와 ‘미래 미디어 패러독스’ 문제, 곧 그것의 유토피아적 측면과 디스토피아적 측면을 핵심 이슈로 제기했다.

2. 유네스코와 미래문해

전상인, 백영연

가. 유네스코와 미래담론

처음부터 유네스코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다. 평화와 번영 등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들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유엔의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을 지적 배경으로 삼아 출범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50-60년대를 풍미한 근대화이론은 전근대사회 혹은 전통사회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회통합을 구가하는 근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적’ 약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낮은 교육수준, 정실주의 및 연고주의 사회관계, 합리적 정신의 결핍, 과학·기술의 저발전, 후진적 사회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는 이른바 제3세계에 서구의 근대 이행 경험을 소개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말하자면 근대화이론의 충실한 전파자였던 셈이다. 유네스코는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 협력을 통해 소위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을 다투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교육, 과학,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변화가 근대화의 동력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유네스코가 이룩한 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 분야에서는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에 주력함으로써 전 세계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고, 과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래와 발전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고민하면서 기초과학의 발전과 결과물 확산에 주력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가 있는 전 세계 유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상호 이해를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주목했다.

하지만 1970년대를 전후하여 근대화이론은 제3세계로부터의 거친 비난과 도전에 직면했다. 사회 발전의 걸림돌은 제3세계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진행되는 제국주의적 강대국과의 불평등한 교환관계라는 인식의 결과였다. 이른바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나 ‘세계체계이론’(World-System Theory)은 제3세계 주변부 국가들의 ‘구조적 저발전’ 상태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 제공자로 근대화를 먼저 이룩한 서구의 중심부 국가들을 지목했다. 문화비평가 사이드(Edward W. Said)가 비서구 문명에 대한 서구 지식체계의 왜곡과 편견을 지적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탈식민성 담론(Post-colonial Discourse)의 도전에 따라 비서구지역 제3세계에 대한 유네스코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의 미래담론은 서구중심적인 것으로부터 세계보편적인 것으로의 이행을 시작했다. 유네스코의 핵심 영역인 교육과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교육 영역에서는 탈(脫)학교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과학 영역에서는 진실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문화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도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 혁명은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유네스코가 자임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공히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네스코가 교육과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추구해온 본질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

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에는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유네스코가 어떠한 미래담론을 새로 제시하는가이다.

새로운 미래담론을 제시하는 일은 유네스코가 스스로 설정한 기구의 5대 기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 연구 및 대응 전략 수립(laboratory of ideas), 지식 정보의 수집과 보급(clearing house),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규범 마련(standard-setter), 국제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catalyst and mot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회원국의 역량 강화(capacity-builder)를 기구의 핵심 기능으로 설정했다(외교부, 2022).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하에서 활동했던 국제지적협력기구(IIC,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s)의 전통을 이어 오늘날 국제연합(United Nations) 체제의 지적 협력을 담당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기구의 5대 기능 중 ‘생각의 실험실’(laboratory of ideas)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유네스코는 2012년부터 아직 학술적으로 공고히 구축되지 않은 ‘미래문제’ 연구에 집중해 왔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는 전 세계 20명의 유네스코 미래학 석좌(UNESCO Chairs in Futures Studies), 연구자, 유엔 프로그램 예견 네트워크 고위급 위원회(High-Level Committee on Programs Foresight Network), 정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문제 네트워크’(Global Futures Literacy Network)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관련 연구와 교류협력을 견인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유네스코와의 공동 기획 하에 전 세계 25개국 약 60여 개의 미래문제 연구소(Futures Literacy Laboratories)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참조) 미래 ‘문제’라는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네스코는 교육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던 문해(literacy) 개념을 ‘미래’라는 주제와 접목했다. ‘글’과 마찬가지로 ‘미래’ 또한 각자가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로 인식하는 접근법은 그 자체로 유네스코가 시도한 혁신적인 생각의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유네스코의 권능영역인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번(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번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6번(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9번(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0번(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1번(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3번(기후변화와 대응) ▲14번(해양생태계 보전) ▲16번(평화·정의·포용)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래문해력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문해 개념은 특히 SDGs의 달성 기한인 2030년 이후 새로운 인류 공동의 목표(Post-SDGs)를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이용해야 하는 핵심적인 기술이자 역량이다. 미래에 대해 역량-기반 접근을 시도하는 유네스코의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나. 미래문해의 개념 및 의의

“미래는 알 수 있는가?” 이는 미래담론 혹은 미래연구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다.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Philop Tetlock)은 이른바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 대부분을 틀린 것이라 판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미래학은 다양한 분야를 굽어모은 의사(擬似) 학문이다. 그 안에서는 누구나 가게를 차릴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래학자의 대다수는 아는 게 거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 외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미래학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과장과 침소봉대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하킨, 2009, 52-53쪽에서 재인용).”

이는 미래연구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미래를 말하고 미래학자의 입을 쳐다본다. 누구나 미래를 지금보다 낮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현재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크든 작든, 싫든 좋든 현재가 개입할 수 있는 틈과 여지를 찾고자 한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는 항상 일종의 ‘밀고 당기는’ 게임과 같은 관계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토마스 정리(定理)’(Thomas Theorem)라 부른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현실로 정의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 된다”는

논리다. 인간의 상상하는 힘과 믿음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바꾼다는 주장이다.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이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주목한 이른바 ‘자기성취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도 같은 의미다. 누군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하거나 기대하면 그것들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까닭은 그러한 믿음에 자신의 행동을 맞춰가기 때문이다. 굳이 어려운 개념을 쓸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전래 속담에도 이런 내용은 많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든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말이다.

개인 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 차원에서 ‘토마스 정리’나 ‘자기성취적 예언’을 논할 수도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앞서 있는 혹은 별난 생각들이 장기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민주주의가 그랬고 복지국가도 그랬다는 것이 하킨의 주장이다. “정치적 사회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개념과 사상들이다. 자유, 평등, 형제애 같은 새로운 사상들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다. 사회 복지와 건전한 경제가 어떻게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새로운 사상과 개념은 복지국가를 탄생시키는 힘이었다. 두 가지 모두 당대 시민들의 영감을 자극했다”(하킨, 2009:26).

현재의 생각이 미래를 바꾸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발상은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미셸 푸코(Michell Foucault)의 소신이기도 하다. 자신의 철학을 ‘일종의 근본적 저널리즘’이라 명명한 그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오늘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한 결과였다(오생근, 2013: 52).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 위에서 유네스코는 미래학 또는 미래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미래문해력 개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본다. 미증유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부정적 미래관 대신 그래도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말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문해력(literacy)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문해력은 18세기 유럽 사회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였는데, 가문의 영광이나 막강한 재력, 사치와 호기(豪氣)에 기반한 전통적 귀족 계급에 새로운 시민 계급이 맞서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통해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거나 세상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의미다(최호근, 2023). ‘리터러시’는

오랫동안 ‘교양’으로 번역되거나 이해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와 ‘문해’ 개념으로 수렴하고 있다(호가트, 2016:522). 문해의 반대 개념이 문맹(illiteracy)인 만큼 문해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2년부터 미래문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서 미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현장 실험(on-the-ground-experiment)을 진행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가 말하는 미래문해의 의미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교수 리엘 밀러(Riel Miller, 2018a)가 잘 정리했다. 유네스코의 미래문해 개념은 한 마디로 예측을 통한 “미래의 활용”(use-the-future)이다. 미래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미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측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미래가 현재 시점에서 취하고 있는 유일한 형태가 예측”인 바, 이를 유익하게 사용하자는 것이 미래문해의 취지다(Miller, 2018a:1-2, 2018b:19).

밀러에 의하면 미래를 왜,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해하는 열쇠는 ‘예측 시스템’(anticipatory system)이다.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첫째, 다양한 종류의 미래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는 다음, 둘째, 우리 주변에서 지금까지 대개 상상되지 않았거나 볼 수 없었던 요소들을 확인하는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미래를 단수형(future)이 아닌 복수형(futures)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세계 도처에서 ‘지식 연구실’(knowlab, knowledge laboratory)을 운영한 결과, 모든 사람이 나름의 예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비가시적이거나 의식적인 예측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래의 변화를 위해 유네스코가 ‘촉매적 리더십’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Miller, 2018a: 9).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것은 미래활용 ‘방식’의 변화가 미래 변화의 ‘약속’이 되리라는 점이다(Miller, 2018a: 9).

미래문해 개념은 미래에 관한 결정론적 혹은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을 거부한다. 대신 누구든지 미래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미래의 문제를 표면이 아닌 근저(根底)에서부터 재구성하는 것으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식(式)으로 말하자면 “연금술로부터 화학으로의 전환”에 버금간다(Miller, 2018a: 2). 요컨대 미래문해

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역량(capability)이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력을 통해 현재에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skill)이다(Miller, 2018b: 15). 미래를 하나의 역량, 일종의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미래연구 전통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밀러는 미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다(Miller, 2018b: 20-21). 이는 일찍이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의 존재론이 ‘자기존재’(Being-in-itself)와 ‘세계-내-존재’(Being-in-the world)를 구분한 데서 착안한 발상이다. 자기존재가 사물 혹은 인간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면, 세계-내-존재는 그러한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성 속에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밀러가 구분하는 두 가지 미래 가운데 첫째는 ‘자기존재로서의 미래’ 혹은 ‘미래를-위한-예측’(Anticipation-for-the-Future, AfF)인데, 여기서 미래란 어떤 목표나 계획 혹은 희망의 대상이 된다. 미래에 대한 ‘전망치’(probability)나 ‘기대치’(desirability)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세계-내-존재로서의 미래’ 혹은 ‘발현을-위한-예측’(Anticipation-for-Emergence, AfE)으로서, 전망이나 기대에 의해 구속될 필요가 없는 ‘폐기 가능한 생각’ 또는 ‘쓰고 버릴 수 있는 비(非)목표(non-goal)’를 포함한다. 기존의 틀이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안을 폭넓게 찾아보자는 취지로서 미래의 다양한 ‘가능치’(possibility)를 탐색하는 것이다. 단수형 ‘미래’가 아닌 복수형 ‘미래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밀러에 따르면 기존의 미래연구는 ‘미래를-위한-예측,’ 곧 AfF가 주도해 왔다. 이는 주로 정치지도자들이나 미래전문가들의 거대담론으로서, “미래에 대한 오늘의 아이디어로 미래를 식민화(植民化)”하는 경향이 강했다(Miller, 2018b: 21). 또한 여기서는 ‘에르고딕한(ergodic) 세계’를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부 시스템의 모든 상태가 결국에는 개별 시스템의 전체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치 한때 운이 좋았던 바보가 결국에는 바보라는 자신의 본질적 속성으로 회귀하듯이 말이다.

이에 반해 ‘발현을-위한-예측,’ 곧 AfE는 미래에 대한 기존의 단안적(單眼的) 접근을 극복하고자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에르고딕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미래란 결코 어떤 목표나 희망, 혹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미래란 현재의 새로운 양상을 발견하고 체감하는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자발적인 연계와 즉각적 대응을 보다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역량과 기술로서 작용한다. 유네스코의 미래문제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미래를 AIF가 아닌 AFE 형태로 상상하도록 설계된 지식창조 과정에 참여하기를 독려한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존재하긴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새롭고-색다른 것들’(emergent-novelty)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새롭고 색다른 것들’을 구체적으로 창조하는 발명과 혁신 또한 수월해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미래는 활용하기 나름이며, 미래문제란 모든 사람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보편적 능력이다. 즉, 미래문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한국과 유네스코 미래담론

유네스코가 미래문제라는 개념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이리나 보코바 전(前)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교육과 문화는 사회 발전의 핵심인데, 한국은 그 대표적 모범사례에 해당한다(중앙일보 인터뷰, 2023.07.06.). 한국의 성공적인 근대화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통한 교육과 과학, 문화, 소통 영역에서의 양적·질적 향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이제는 한국이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줄 때다.

특히 대한민국은 극빈의 분단된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를 모두 이룩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은 지역적 토착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국가주도 장기 미래계획의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IMF 국가 부도 상황 등 혼란과 위기를 지속적으로 겪어온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위기적 징후의 종합판이면서도, 위험하고 불안한 미래를 언제나 희망과 낙관으로 바꾼 역사를 보유한 나라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새로운 미래담론을 준비하는 유네스코를 향해 ‘새로운

글로벌 미래표준'(New Global Future Standard)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 혹은 중심부와 주변부를 잇는 중진·교량(橋梁) 국가로서 한국은 미래문해와 관련한 최적의 실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들, 예컨대 공교육의 붕괴,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능 및 진실성 논쟁 격화, 문화적 정체성 혼란과 무규범 상태,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음영 등은 한국이 유네스코발(發) 미래담론의 동화·수입 국가에서 세계적 미래담론의 창조·수출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미래문해에 있어서 '현지맥락'(local context)를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유네스코 입장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II. 교육

김두환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가 전환의 시대를 말한다. 한국 사회에도 시대 전환의 담론이 넘쳐나서 그러한 주장이 의례적 언사가 되어버릴 지경이다. 그렇다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가벼운 것이란 뜻은 아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당사자들이 혼란스럽다. 산업화 사회의 관성적 힘이 가리키는 교육과 직업, 좀 더 노골적으로 교육과 돈벌이 사이의 관계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이다. 문제는 교육과 돈벌이를 다시 연결하라는 담론, 즉 계층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을 회복하라는 담론은 이미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엥겔, 2023(2015); 김두환, 2017).

한국은 2021년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인정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이미 벌어지고 있던 혼란에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이 더해지면서 참담한 상황이다. 평균 소득 수준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심화하는 지위 획득 경쟁과 불평등에 대한 담론은 문제의 근원으로 교육을 지목한다. 그것은 우리의 학교가 문제의 중심이라는 대중적 인식에서 확인된다. 그러는 사이 한

국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진보로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중심 산업의 생산체계가 자동화되면서 제조업 노동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전대미문의 감염병인 코로나19에서 보듯 참고할 수 있는 선례 자체가 없는 상황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 위기,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서구 선진국 사례의 수준을 압도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 위기 등이 미래 세대의 삶을 중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필자는 지난 한국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의 미래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다루면서 그 키워드를 ‘삶의 안전판으로서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단순히 코로나 위기가 야기했던 교육 연속성의 위기에 대한 안전망의 구축을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 속도가 지난 시기 어느 때보다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교사들의 연이은 비극이 확연하게 보여주듯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불화와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우리는 자동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제도와 사회적 관행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역할이 형해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시대의 요구를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불균등하게 분포한다’거나 ‘비동시성의 동시성’ 등의 표현이 이런 우리 시대의 상황을 너무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배경으로 필자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을 ‘학습자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학교와 지역의 협업을 통한 교육을 제안한다. 학습자가 삶을 영위하는 터전인 지역사회(communitiy)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 양육의 분리를 넘어서는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개인적 요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재생산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더불어 살면서 서로가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적 분업’이 고도화된 사회다. 한마디로 구성원 각각이 가진 서로 다른 재능을 나누기 위한 자기 생

산과 상호 의존의 체제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이러한 엄정한 현실을 치명적으로 일깨워 주었다. 그 충격은 기왕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거세게 요구하기도 하고 사회적 연대의 복원을 위하여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생활생태계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유창복 이재경 김다예, 2020).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세계적 전환과 더불어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변화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다. 흔히 정해진 미래라고 말해지지만 인구감소가 가져올 미래를 오로지 노동력과 자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교육의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출생, 고령화에 더해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가 어떻게 한국 미래사회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변화이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변화의 중심에는 가치관의 변화라는 문제가 있다. 청년 세대에게서 발견되는 두 개의 가치 변화는 서로 대립적이다. 하나는 개성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등장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도생에 기초한 공정성이다. 문제는 각자도생인데 이것은 새로운 세대에게 자해(自害)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각자도생의 현실은 미래세대에게 한 개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을 피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조금 적극적이라면 우선 나부터 살고보자는 마음을 먹게 만든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일 수 있지만, 집단적 차원에서 자기 세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종말로 향하게 만드는 결말을 내고 있다.

1964년에 서구의 기술 발전 상황을 보면서 자동화 시대가 왔음에도 산업화 시대의 파편화와 중앙집중화 논리에 갇힌 감각 마비를 지적한 마셜 맥클루언(맥클루언, 2011: 5-11, 31-57)의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의 등장을 바라보는 데 영감을 준다. 한국에서 개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초 X세대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가족주의와 결합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이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해방적 콘텐츠와 함께 개인화가 등장하면서 문화적 전환, 즉 가치관의 변동이 발생한다(홍찬숙, 2022). 그리고 지역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바람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조희정, 2021; 윤찬영 십병철, 2021).

자동화 시대에 '나'의 차원에서 고유성을 추구할 정도로 다양성에 민감한 이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이들이다. 어쩌면 이들이 맥클루언이 지적한 산업주의 시대의 감각 마비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 문화,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기회, 창의성, 자유,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곳, 다양성 등 이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이들이 모두 산업화 시대의 감각 마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웅변한다. 문제는 이들은 여전히 소수이며 우리 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러한 동향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AI 활용 능력을 미래교육의 전면에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주장은 대개 변화하는 산업의 요구, 즉 노동 시장의 요구에 교육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간의 삶이 노동과 소득 사이의 강력한 연결 고리에 의존한다는, 경제에 대한 매우 협소한 관점이다. 이런 삶의 방식은 역사적으로 절대 보편적이지 않다. 그것은 서양 르네상스를 주도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독립 도시에서 탄생했다. 이후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중세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인 근대 사회로의 긴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전성우, 2013: 488-492).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상하도록, 즉 아이들이 설계하고 만들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더욱 교육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이 보여주는 최신의 성과를 무시하자는 말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성과를 도약대로 삼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목적은 더더욱 교육 그 자체이어야 한다(푸레디, 2019; 앵겔, 2023).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이들이 이 혼란스런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습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 문명도 가능하지 않았다. 교육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인간이 창조해온 문화의 진보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Parrington, 2021: 전자책 110).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인간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는 길로 바뀌어야 한다(이글먼 브란트, 2019). 인간이 만든 도구인 인공지능이 지식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근대 사회에서 시작된 비인간화된 노동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인간이 가진 창조적 본성과 사회적 본성에 적합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김두환, 2022; 2019).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미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

영역에서 한국인이 선호하는 미래상이 ‘어디서나 계층 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임을 보고했다. 교육의 역할을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인식해 온 관성의 힘이 여전히 심대하다는 점,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 경쟁과 그 결과의 불평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시된 정책 목록인 ‘사회 분배의 형평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나,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이 과연 교육의 영역, 즉 학교가 감당할 일인가? 교육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 그 자체여야 한다. 교육 그 자체에 충실할 때 학교는 ‘멋진 나를 만드는 즐거운 배움터’¹가 되고 아이들이 매일 가서 머물고 싶은 곳이 된다. 학교를 이렇게 바꿀 때 교육은 탐구하고 실행하면서 스스로를 창조하고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미래세대를 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사회의 미래

가. 산업의 변화와 노동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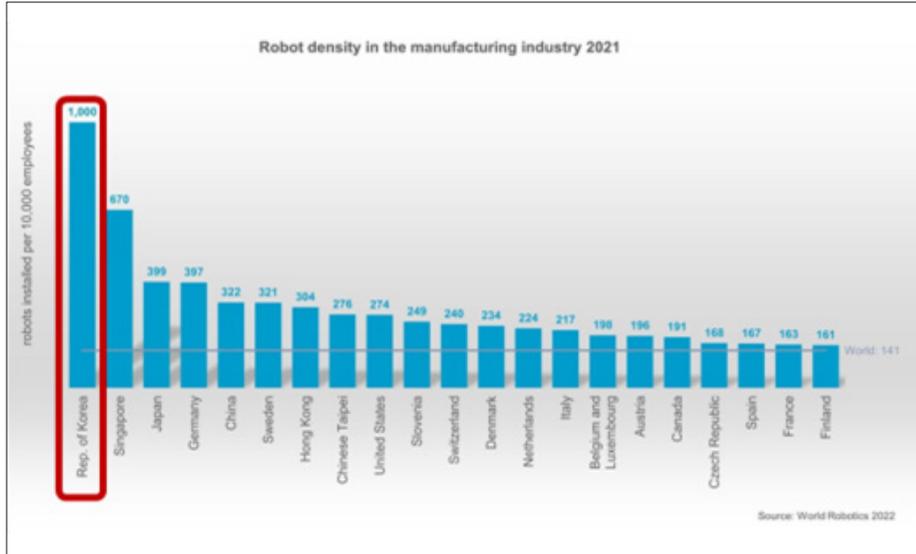
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변화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담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업 활동과 노동 소득 사이의 균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1>은 한국 제조업 분야의 로봇 밀도(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의 수)가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제조업의 로봇 밀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세계 경제가 대침체의 위기를 겪을 때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이 순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전

1 필자가 일하는 대학 앞에 있는 초등학교의 정문에 몇 해 동안 걸려 있던 현수막의 내용.

통적 고부가가치 제조업 국가인 독일과 일본에 비해 로봇 밀도가 두 배 이상 높다.

이러한 변화는 장하성(2015)이 인용한 2013년의 통계수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는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순이익의 총액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한 몫의 비율이 59.6%임을 지적한다(장하성, 2015: 444 미주 11). 한국에서 기업의 총 숫자가 몇 십만에 달한다 해도 이 비율이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100대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고용의 비율이 3.6%에 불과하다면 이야기는 매우 다르다. 순수이익의 59.6%를 가져가더라도 그만큼 상당한 수준의 고용을 담당한다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익을 독점하면서도 고용이 3.6%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업 활동과 노동 소득 사이의 균열을 나타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노동 없는 기업 소득이다.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대표 100대 기업의 노동착취가 심화됐다는 뜻이 아니다. 전통적인 기업과 노동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착취는 고용을 전제로 하는데, 고용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착취를 할 수 있을까.

그림 2-1. 2021년 국가별 제조업 노동자 10,000 대비 산업로봇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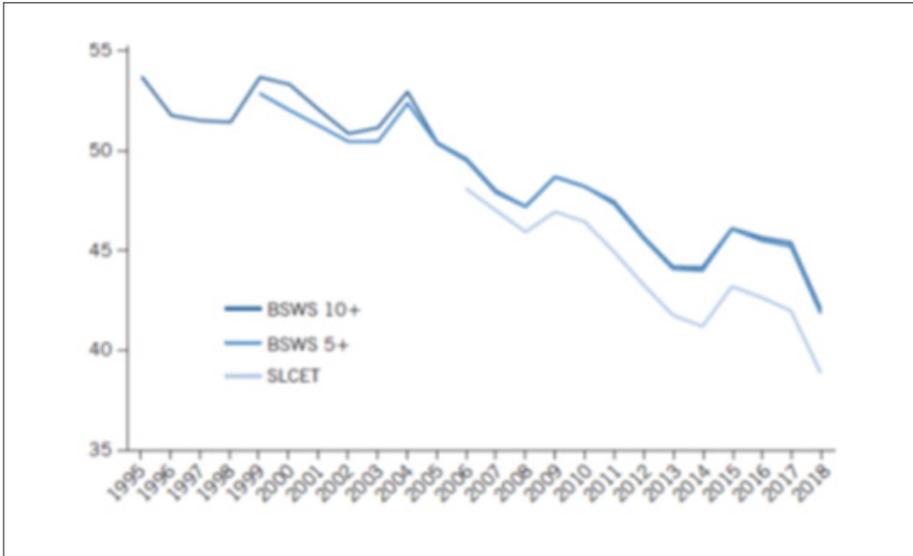
2012년의 일이지만 이러한 한국 산업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폴 크루그만의 설명이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노동시장이

첨단 기술의 요구에 맞는 노동자를 공급하지 못하는 숙련편향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로 진단해 왔다. 한마디로 교육과 기술 사이의 경쟁에서 교육이 뒤쳐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SBTC가 확대하는 노동자 내부의 임금 불평등을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교육과 훈련의 고도화를 제시해 왔다(Goldin and Katz, 2008). 이와 달리 크루그만은 한국의 산업과 노동 시장과 같은 상황을 자본편향기술변화(capi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 CBTC)로 불렀다(김두환, 2016). 생산 시설의 자동화와 그에 따른 자본 규모의 거대화로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아우르는 이 변화에서 자본의 힘이 커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크루그만이 주목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로봇의 부상’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시대전환을 이야기한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바꾸어 나가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간 보편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하지 않는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근대 사회의 출현에 이바지한 혁명으로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에 더해 문화혁명을 말한다. 그러면서 지구적 규모에서 보면 이 세 개의 혁명 중 어느 것 하나도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것은 기나긴 혁명이다(윌리엄스, 2007[1961]).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말이고,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최근 산업기술 자동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변화를 보자. 한국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다. <그림 2>는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되던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든 양상을 보여준다. 소규모 부침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한국의 주당 노동시간은 10시간을 훨씬 넘게 감소했다.

그림 2-2. 주당 노동시간 추이 1995-2018



출처: Lee, 2020

이 추세를 바탕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좀 더 밀어붙여 보자. 자동화 기술이 더욱 확대되면 한 국가의 경제적 생산과 부의 원천은 인간의 노동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 대다수는 소득만을 위해 바쳐온 노동시간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더 많은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창조해 온 온갖 도구와 수단으로 그 자유시간을 활용한다면 예술적, 과학적 성취를 더욱 신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19세기 마르크스가 자동화 되어가는 공장을 보면서 했던 상상이다. 그 상상을 마무리하면서 1821년에 출간된 다른 사람의 책에서 ‘한 나라가 진정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시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는 주장을 가져와 인용한다(Marx, 1973: 704-706).

코로나19의 영향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의 위기가 가져온 시대적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는 매우 강력했다. 산업 생산의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의 심화 및 확산이 가져온 교육 위기 담론의 논거는 현재의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의 요구에 대응

할 미래 세대를 준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술 추격'의 관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는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사람이 일하는 이유를 오직 소득의 확보에 가두어 버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면 교육은 항상 기술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Goldin & Katz 2008). 그렇게 보면 현재의 교육은 기술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 된다. 이 협소한 경제학적 관점은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동력(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처방을 반복하고, 이는 과거 시대의 처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러한 처방의 함의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교육 위기 담론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게 되면서 미래 세대의 삶에서 나타날 다른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가능성이란 바로 자유시간의 확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주요 위협 중 하나는 현대인들이 사회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휴즈 샬록 마틴, 2018: 325).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 사회가 너무 커지고 추상화 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일상에서 사회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 초고속 인터넷 통신 기술의 결합은 지구적 차원을 하나로 묶어내는 효과를 일으킨다.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재화의 생산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현대 문명의 능력이 인간의 사회적 삶에 열어 줄 수 있는 해방의 가능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이유 역시 지구적 규모로 커지면서 통합되어가는 경제와 사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새로운 가능성은 개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치와 제도를 바꾸는 집단 수준에서의 노력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경제적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임금의 축소가 아닌 개인의 자유시간 증대를 의미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천의 문제이며, 집합적 차원의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학교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새롭게 상상해야 한다.

나. 자동화 기술의 확산과 새로운 가능성

마셜 매클루언의 1964년 저서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에서 마지막 장의 제목은 ‘자동화: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learning a living)’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클루언에게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며, 언어와 문자를 포함해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모든 도구는 미디어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도 포함된다. 그는 미디어를 통한 인류의 확장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마비 효과’에 대해 책의 서두에서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자동화 기술의 본질과 그 이전의 기계 기술의 성격을 대비한다. 우선 산업 혁명이 달성한 기계 기술의 본질을 파편화로 파악한다. 기계 기술이 인간관계를 파편화시키고 중앙 집중화하며 피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계 기술이라는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 끼친 파편화, 중앙 집중화, 피상성에 인간이 무감각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기계 기술이라는 미디어의 효과는 인간의 삶을 파편화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 시대의 제도와 사회생활은 파편화하고 분리하는 기술적 분업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적 분업과 사회적 분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분업은 우리의 자기 생산과 상호 의존성(통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동화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매클루언은 자동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동화를 통합적이고 분권화된 것으로 규정했다. 인간의 확장과 연장을 의미하는 이 두 기술은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와 개인이 내면과 맺는 관계를 다르게 구성한다. 즉,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동화는 기계 기술이 만들어낸 기존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 기능, 역할을 부정하면서 제거하지만(고용 불안을 야기), 긍정적으로는 인간이 진화를 통해 획득한 창조적 능력에 적합한 역할을 창출함으로써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비인간적 노동과 기계 생산에 맞춰진 시장과 교육은 자동화 시대에 부적합하다(매클루언, 2011: 592).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된 시장(사실 생산자와 소비자는 같은 사람이다)과 파편화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즉 프로슈머의 통합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자동화 시대에 그러한 분리는 적합하지 않은 파편화된 구조인 것이다. 기계적 표준화와 파편화된 전문화는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술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교육적 요구는 사람들이 내면의 욕구를 위해 스스로 생산하고 예술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줄 충격적인 변화다. 60년 전 서구 과학기술의 진보를 표상한 자동화 기술을 인간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미디어로 파악한 맥클루언의 통찰은 놀랍다.

그런데 기계의 진화, 과학기술의 진화를 완성하는 자동화가 인간의 사회적 삶에 가져올 가능성을 본 것은 1964년 맥클루언만의 관찰이 아니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자동화된 기계를 상상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연장들이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든,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해서든, 알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베틀의 북이 혼자서 앞뒤로 움직이고, 연주자가 저절로 움직이는 리라를 연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러면 공장주들은 더 이상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노예의 주인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시올라, 2005: 8 쪽에서 재인용).”² 물론 기원전의 고대 그리스에 자동기계는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자유 시민을 위해 인간, 자유 시민의 본성에 반하는 생산노동을 대신해줄 노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한 말을 했다(베나나브, 2022: 157-158). 그 외에도 19세기 마르크스, 1930년대 케인스, 1980년대 앙드레 고르, 그리고 최근 스티글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다(김두환, 2022).

자동화로 인한 탈중양화와 관련하여 슈마허의 논의를 보자.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대안 경제를 주장한 슈마허는 탈중양화된 지역 경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경우 경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자원 기반의 생활의 생산, 즉 경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값이 싸며, 소규모 이용에 적합하고, 인간의 창조적 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기술(p. 47)”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기술 분업에 의해 분절된 인간의 노동은 수작업이든 지적 노동이든 자동화된 기계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슈마허

2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은 마르크스의 『자본』에도 등장한다.

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여가 시간에만 즐거운 것을 하는 분리를 극복하는 것,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통합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부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흔한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그것은 재미와 자아실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노동(일)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버크(Edmund Burke)의 이야기도 있다. 프랑스 혁명 후의 정책을 기하학적이라고 비판한 버크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공중에 대한 애정을 배우게 된다. 이웃과의 냉담한 관계 속에서는 공중에 대한 애정은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웃과 어울리고자 하며 관습화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들 이웃은 우리의 생활 근거지이며 휴식처이다.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이며, 국가 권위로 하루아침에 국가 위상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지역성의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지도 못한다 (Burke, 1837: 543 <니스벳, 1990: 990-200에서 재인용> 강조는 필자).”

실제로 기하학적 추상화를 통해 계획도시 파리를 중심으로 중앙집중화를 달성한 프랑스의 혁명 이후의 역사는 지역을 기초로 하는 삶의 구체성을 무력화 하는 과정이었다. 자연발생 촌락의 경계와 계획도시의 공간 분할을 떠올려 보라. 대규모 계획도시의 분할은 지역에 기초한 활동을 없애버림으로써 지역 이름에 따라 사람들을 부를 수 없게 만든다. 그곳의 거주민은 모두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어 버리게 되지만, 사실은 어떤 것에도 소속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버크는 이처럼 친밀성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인 지역의 무력화를 비판한다. 남은 건 추상적 중심이 되어 지배하는 거대사회로서의 국가다. 그렇게 완성된 중앙집중화는 사람들이 구체적 생활과 삶의 터전인 지역을 바탕으로 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 역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화 초기부터 최근까지도 서구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빨리 받아들여 이를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주입하여 서구 선진국을 추격해야 한다는 정명이 우리의 교육을 지배하면서 지역의 자원과 에너지는 고갈되어 온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무너지고 체급을 경량화한 가족주의(Kim, 1990)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향하는 구심력은 가속이 붙고, 전통사회의 확대 가족이 담당해 온 친밀한 유대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자체가 황폐화됐다.

다. 한국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교육

최근 한국사회의 초 저출생을 확인한 어느 외국인 학자의 일성이 화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신문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말도 인용한다. 그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출산율이 낮은 배경”이라고 말한 것을 신문은 함께 보도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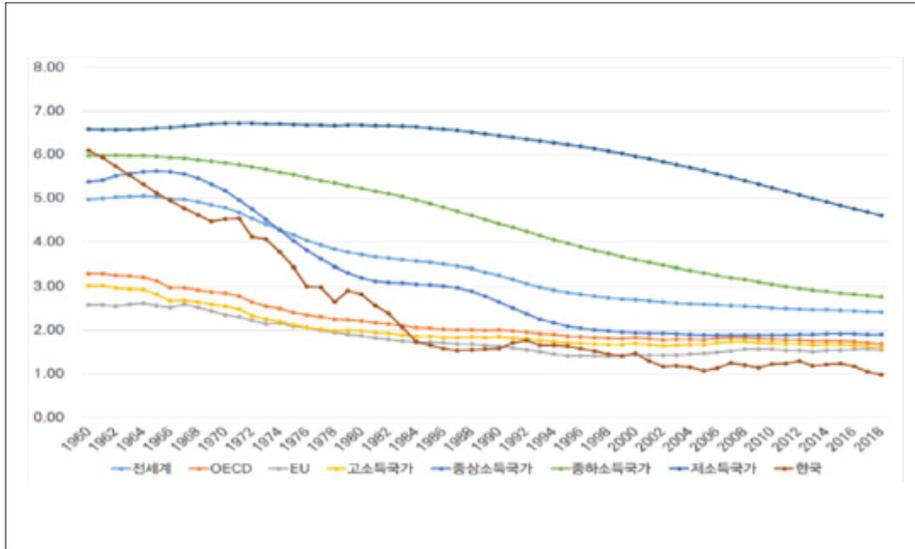
<그림 3>이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밑의 선 세 개는 서구 선진국(OECD, EU,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 변화를 보여준다. 60-70년대를 지나며 합계출산율은 3.0언저리에서 2.0 아래로 내려오지만 이후 2.0 전후로 안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가운데 두 개는 한국과 중상위소득 국가의 출산율 변화 그래프로, 출산율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60년대의 5.0 가까이에서 2.0 언저리로 가파르게 떨어진다. 크게 보아서 서구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진입한 시기가 60-70년대라면 중상위소득 국가는 70-80년대에 소비사회로 합류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이른바 인구 규모를 유지할 할 수 있는 지지선인 2.1 아래로 떨어진다.

여기서 질문해 보자. 소비사회의 진입과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 단위에서 평균소득의 증가가 불평등의 확대와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균소득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에게 소비의 압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수 대중의 소득은 상위 소득자들의 소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결혼이나 동거를 하면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후기 근대 사회

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873#home>

의 개인화가 경제생활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선택과 혼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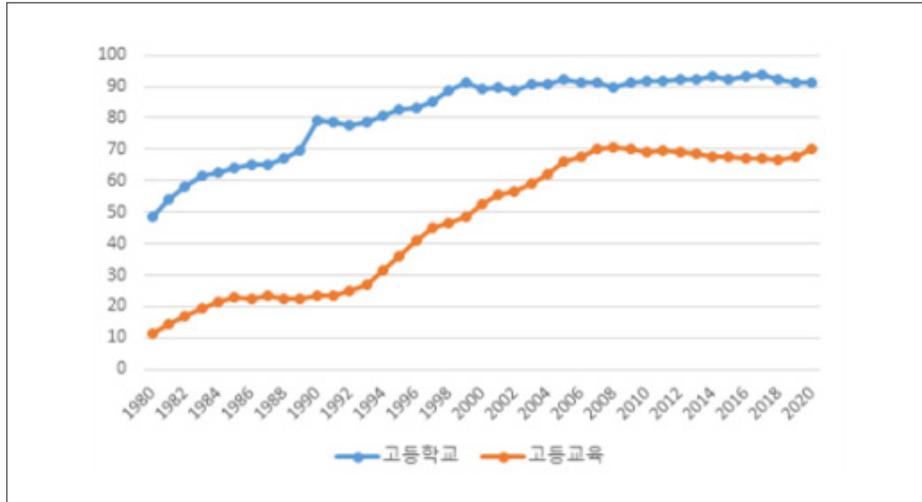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21.02.10.

고소득국가: 2019년 1인당 GNI \$12,536 이상 / 중상소득국가: 2019년 1인당 GNI \$4,046~\$12,535

중하소득국가: 2019년 1인당 GNI \$1,036~4,045 / 저소득국가: 2019년 1인당 GNI \$1,035 이하

그런데 “한국은 망했어요”라는 탄성이 나오게 한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은 어떻게 된 걸까? 성년에 이르러 결혼, 즉 가족 형성을 거부하는 청년세대의 개인적 선택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러한 집합적 저항은 과연 개인의 선택일 뿐일까? 위에 인용한 콜먼 교수의 말에 등장하는 교육 환경은 입시 과열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와 오늘의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입시 과열은 어떻게 다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성세대의 청년시기 경험과 현 청년세대의 교육 환경 간의 결정적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4.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취학률 (1980-2020)



자료: e-나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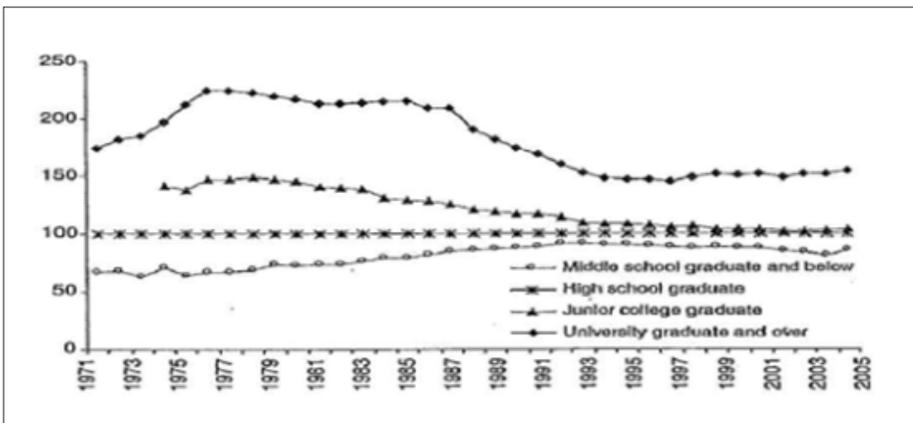
<그림 4>에서 고등학교 취학률은 1999년에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취학률과 고등교육 취학률의 간격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보통 우리가 보게 되는 관련 통계는 진학률이다. 문제는 진학률 추이는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른 취학 여건의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압축적 성장을 이루면서 빠르게 소득이 증가해 온 한국이라면 더욱 그렇다.

한국의 1인당 명목(실질) 국민총소득은 1980년과 2020년에 각각 103(467)만원과 3,679(3,493)만원이다.⁴ 명목소득을 비교하면 한국은 41년 동안 약 36배의 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1인당 소득은 총인구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1980년과 2020년 사이에 증가한 인구의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시기 사이에 한국 인구는 약 13,657,000명 증가했다. 즉, 한국의 국가수준에서 경제 규모가 성장한 정도는 개인 소득의 성장 정도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이유로 회자되는 ‘인구 5천만 이상을 가진 규모의 국가 중에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7번째 국가’라는 말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4 실질국민소득은 연평균 물가지수(2015년=100)를 이용해 산출. 실질 소득에 주목해 보자. 1980년은 명목소득의 4배가 넘는 실질 소득이고 2020년 실질소득은 명목소득보다 작다.

국가 전체로 보아 거의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을 향한 경쟁에 참여하는 국가가 되는 데는 규모의 경제가 기여한 바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980년 한국의 인구가 약 3,812만 명이고 2020년에는 약 5,178만 명으로 약 1,365만 명이 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로 인해 전체인구 중 노동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알 수 있다.⁵ 그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생산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어도 수많은 청년들의 교육 비용을 감당하고 전 국민의 생활 경제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동시에 그것은 교육 경쟁 참여자 수가 막대하게 증가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의 고등교육은 민간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 현재의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교육 경쟁의 강도가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은가?

그림 2-5. 교육 수준별 상대 임금 추이(1971-2005, 고졸=100)



출처: Chang 2010: 47

그에 비해 고등교육 이수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수익률은 기성세대의 그것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그림 5>는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4년제 대학을 졸업

5 거기에 1980년의 기대수명이 66.15세였는데 2020년 83.3세로 높아진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즉, 만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노인인구가 높은 빈곤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인구에서 생산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한 사람들이 누렸던 임금 프리미엄이 고졸자의 임금에 비해 두 배를 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에는 고학력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자 기업도, 국민도 4년제 대학의 정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후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학 교육의 급격한 팽창을 경험한다. 바로 산업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길, 즉 SBTC 상황의 요구에 적합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문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을 향한 경쟁에 참여하게 한 개인적 선택은 집합적으로는 고등교육 이수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노동시장이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은 인공지능과 생산 시설의 자동화가 노동시장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1993년 미국의 경제학자 줄리엣 쇼어(Juliet B. Schor)는 『과로하는 미국인: 예상치 못한 여가 시간의 감소(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전 20년간(1969-1987) 미국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했고 이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거나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비추어도 이러한 경향은 예상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미국의 소비자본주가 미국인들이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 많이 일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동향이 미국인들의 여가시간을 줄어뜨리게 한다고 했다. 더욱이, 이러한 소비가 임금 부족으로 인해 빚을 내면서 일어난다면, 여가는 사치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우리 청년 세대도 유사한 소비자본주의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일곱 번째 국가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그 수준에 어울리는 소비를 하고자 하는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김유선, 2015)과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의 확대 등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세대는 한국 사회가 집합적으로 달성한 부의 수준에 적합한 소비 압력을 받는다. 그 사회적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 청년들은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압력은 대규모 산업이 노동비용, 즉 고용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높이려고 하면서도 그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자극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만든 결과이다.

필자가 청년세대가 직면한 이런 상황을 주목하는 이유는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연관이 있다. <그림 6>은 산업화 초기인 1963년, 2023년 현재, 그리고 30년 후인 2053년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다. 최근 한국에서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들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슬로건을 내세우며 아이 한명 한명의 다양한 성장 환경과 개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중요한 정책으로서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 관점에서 필자는 우리의 집합적 노력에 따라 인공지능 자동화는 인류의 사회적 삶에 자유시간의 확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시간의 확장 그 자체가 실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여가를 의미했던 ‘디아고게’가 교육(파이데이아 *paideia*)을 통해 지적 미학적 열중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자유민의 덕목은 자신의 디아고게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교육이 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하위징아, 2010: 308).

그림 2-6. 인구구조 변화 비교 1963, 2023, 2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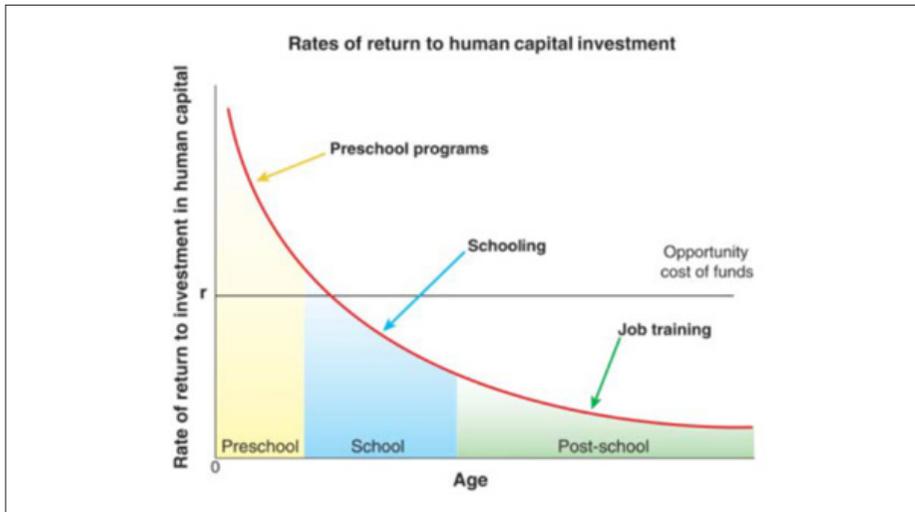


자료: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3.jsp>

여기서 한 가지, 인간의 창의적 능력의 발현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모방과 사회적 학습이었음을 상기하고 싶다(앨런드, 2023).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성체가 될 때까지 오랜 발달기를 보낸다. 그중에서도 유아기는 모방을 통한 사회적 학습의 결정적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 시기를 보내는 가정이 현대사회에서 교육 불평등, 그래서 불평등 일반의 근원이라고 보는 부르디외는 특히 가족 내 문화적 자원이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이 문화적 자원 중에서 중간층 이상의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체득하는 일상적 행위윤리(아비투스)가 계층적 지위가 유사한 학교 교사의 선호에 조응하는 문제를 지적했다(부르디외, 2000). 그래서 그는 학교가 중립적 기관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한마디로 학교는 계층 상승이동의 역할보다 계급 재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제도기관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학교에 오는 학령기 아이들에게 중립적이지 않은 학교문화가 가족이 소유한 문화자본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증폭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경고는 한국 사회의 미래교육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림 7>은 인적 자본 투자, 즉 교육 투자의 수익률이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가 가져올 노동력 공급을 걱정한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발견이다. 유아기와 아동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 양적으로 줄어드는 인적 자본의 문제를 질적 가치의 고양으로 보완할 정책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개별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준의 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어떻게 적절한 교육적 발달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만들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2-7. 헤크맨(Heckman) 곡선



출처: Heckman, 2006 Science

라. 가치관의 변화: 각자도생은 집단적 자해(自害)?

지난 20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가치관을 사회학자 김홍중은 ‘생존주의’로 파악한다. 생존을 “다른 어떤 과제들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특정 사회적 단위(개인, 가족, 조직, 집단, 민족, 국가)가 공

유하고 있는 집합심리(mentality)와 그런 심리구조를 구성하고 생산하는 사회제도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앙상블(김홍중, 2017: 246~247)”이 생존주의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생존을 중심으로 한 가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런 경험으로 우리는 물질적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되었고, 물질적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바쳐 경제적 성공을 성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방식은 이제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성세대는 물질적 생존주의 가치의 한계에 갇혀 새로운 문화사회로의 질적 전환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만연한 현재 상황에서 생존주의 가치의 한계에 갇힌 일부 상업적 엘리트 지식인들은 대중을 위협하는 과장된 정보를 담은 미래 담론으로 새로운 세대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지금 한국 청년문화의 핵심에 경제적 안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⁶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적 안정을 넘어 발현되는 새로운 세대의 긍정적 에너지를 복돋을 방법에 대한 모색을 교육의 영역에서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살을 연구했던 고전 사회학자 뒤르켐은 생명체로서 인간이 가진 자기보존 본능, 즉 살고자 하는 욕망은 죽음보다 “삶이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을만한 증거”(1984: 190)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자살이 증가하는 것은 “삶 자체가 매력을 상실했고 불행이 그것(자기보존의 본능)을 능가했다는 것을”(1984: 190) 확인해주는 지표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특정 사회에서 자살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 일반에서 삶의 행복이 줄어서라는 것이다(1984: 193). 뒤르켐은 사회의 크기가 커지면서 분업이 증가하는 것은 환경이 다양해져서가 아니라 생존경쟁이 더 격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두 유기체의 속성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같은 욕구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경쟁이 심해지지만, 공존하는 개체들이 서로 다른 종이라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단원의 지적을 상기한다(Durkheim, 1984: 208). 이런 뒤르켐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가

6 이 점을 역설하는 모종린의 주장을 <<https://brunch.co.kr/@riglobalization/344>>에서 참조.

지 능력, 즉 시험 점수의 차이에만 초점을 두고 경쟁하는 삶의 생태적 환경은 서로를 해친다.

이런 견지에서 생존주의의 강력한 관성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각자도생의 가치관은 그것이 개인의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 선택이지만 집합적 차원에서 자해(自害)적 성격을 갖는다. 젊은 세대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동향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급격하게 청년세대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기성세대에 비해 경제적, 정치적 힘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한다. <그림 6>에서 읽을 수 있는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다름 아니다. 현재의 청년세대가 개인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미래는 자신의 세대가 겪을 불리한 세대 격차를 후대에서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집합적 추세의 책임이 청년세대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의 미래교육을 고민할 때 이러한 동향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교육의 영역이 어떻게 이러한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데 기여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하나의 길로 집중하게 만드는 교육을 다양한 삶의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소비에 있어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시대의 효율성 논리에서 벗어난 변화이고, 소위 밀레니얼 세대와 젊은 Z세대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산업화 시기 부유층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자되던 과시적 소비와는 다르다. 남에게 과시하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증시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은 생산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을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하던 시대가 저물고 '단품 생산', 즉 맞춤형 생산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는 지루한 평균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은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다(토드 로즈, 2018). 삶의 구조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효율성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육도 그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우리 교육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가야 할 방향으로 거론되는 '삶과 삶의 일치'가 바로 이 점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산업화 시대의 제도와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새로운 교육은 부분적으로 교사를 비롯한 현장의 헌신과 열정에 기대고 있어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몰두해 온 시험의 문제, 즉 평가의 방식에 집중하여 교육의 성과를 가늠해 온 문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에 집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배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교육의 획일성을 강화해 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평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수많은 청춘들을 사회 시스템 밖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 모두가 다양성을 말하며 우리 시대의 교육이 개인이 고유한 자기생산과 창조적 역량을 갖추어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낡은 시스템의 줄 세우기 관성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이다.

3. 한국 교육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유네스코는 현재의 “교육이 우리가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2022, 1)”고 진단하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한다. 그것은 20세기 공교육의 목표를 넘어서 “공유되고 상호의존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교육을 새롭게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는 미래 한국 사회의 교육을 구상하면서 현재에 기초하여 실천해야 할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앞서 논의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세계적 환경의 변화에 기초해 아래 3가지 항목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 리버럴 아트 교육: 모든 인간의 잠재적 역량이 잘 발휘되도록 만드는 기초
-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한 진정성과 존중
- 엘리트 교육의 혁신: 평가(시험) 중심 교육의 대변환

이 3개의 목록은 유네스코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제안과 궤를 같이한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사회계약이 제안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인류가 축적해 온 공동의 자원으로써 정보, 문화, 과학이라는 공유지식을 습득하고 그 발전에 기여할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적 양상은 시장 경쟁의 선두를 차지하려는 거대 기업이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진보의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 진보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Acemoglu Johnson, 2023). 그것이 유네스코의 제안이 담고 있는 정신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전치형 홍성욱, 2019). 어쩌면 미래의 진실은 아직 오지 않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비동시성의 다른 시간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위의 세 가지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거기서 출발하는 짧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목록이다.

가. 리버럴 아츠 교육: 모든 국민이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량 갖추기

이제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로봇이 생겨났으니,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은 모두 자동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자유롭게 사기를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상상을 현실화 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산업생산의 자동화가 이상적 유토피아의 실현을 자동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베나나브, 2022).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득 분배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선호하는 능력을 통한 분배가 소수 엘리트의 매우 협소한 이익만을 이롭게 하는 현 상황을 바꾸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Acemoglu Johnson, 2023). 이 문제 또한 유네스코(2022)가 제안하듯 우리로 하여금 집합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정치 및 사회계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대화와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소득 분배에 관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성공해도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자유시간의 확대가 저절로 자유시간의 선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자유시간의 확대는 필요조건일 뿐이다(고르, 2011: 141). 한 예로 현재 우리는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거대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오락물에 24시간 노출되어 있고, 늘어난 여가시간에 그것을 소비하면서 현실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테리 이글턴이 지적하듯 문화산업의 핵심 동기가 문화적이지 않다는 점이다(이글턴, 2021: 191).

1930년의 케인스가 1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걱정했듯 “경제적 걱정에서 풀려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과학과 복리가 안겨줄 여가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케인스, 2009: 210-211)”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돈벌이로부터 해방된 시간을 어떻게 일과 여가의 분리가 사라진 예술적 자기 생산을 수행하는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현대인은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을 자연의 일부처럼 여기는 체화된 노동윤리에 붙들려 있다. 이는 리버럴 아츠가 교육의 기초가 되는 데 커다란 장애다. 성인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의 교육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사실 소득 분배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다. 앞서 필자는 자동화 기계는 없었기에 자유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노예의 존재를 정당화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했다. 고대 그리스의 자유 시민들에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했던 디아고게가 지적 미학적 열중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교육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 교육이 담당했던 기량이 이른바 리버럴 아츠(liberal arts)이다. 바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량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것은 물질적 생산을 노예에게 맡긴 자유 시민처럼 선택 받은 상층계급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대중교육이 시작될 때 미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지난날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학습한 것을 모든 아이가 배울 수도, 그래서 안 된다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있었다(앵겔, 2023: 23).” 그리고 그것은 학교 시스템의 위계적 분화를 통해 실행되었다. 한국 사회의 학교 시스템은 어떤가? 21세기에 한국 중등교육의 평준화는 사실상 해체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대부분의 학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학교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학교는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량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될 수 있을까? 누구도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나친 단순화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출발부터 우리 교육은 산업의 도구이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일자리를 차지하려는 목표를 실현하는 길이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비의 압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왔다는 발견(그림 2 참고)이 가리키는 것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산업화 시대와 달리 국민의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떤가? 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고 싶은 장소인가? 학교에서 아이들은 자기 발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너도 나도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라고 말한다. 양질의 교육을 평생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네스코가 제안하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두 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다. 그렇다면 우선 교육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한국 교육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만 자기 발견과 자기 창조의 기쁨 없이 돈을 버는 목적만으로 학습을 동기화하는 학교를 바꾸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의 근간이기도 하다.

나.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근대적 개인의 이상을 모두에게 실현하는 교육

필자는 앞서 수전 앵겔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 하나가 미국 역사에서 대중교육이 시작될 때 엘리트주의자들이 그 대중교육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부분이다. “지난날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학습한 것을 모든 아이가 배울 수도, 그래서 안 된다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있었다(25쪽).”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학습한 것?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생각은 사라졌을까? 자유인으로서의 삶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더구나 한국의 인구감소 위기를 생각하면 단 한명의 아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래서 공공재로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는 소중한 장소다. 학교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만들어 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인은 누구나 태어날 때 똑같은 현생인류의 진화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타고난 뇌는 절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이글먼, 2022: 18~19). 데이비드 이글먼(2022)이 설명하는 생후배선(livewired), 케빈 랠런드(2023)가 주장하는 협동양

육을 통해 가르침(teaching)의 비용을 줄인 유전자와 문화 공진화론, 데이비드 무어(2023)가 설명하는 후성유전(epigenesis), 즉 유기체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비유전적 요인들도 있다. 이러한 요인 모두는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체계 속의 일원으로서 모든 아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각자의 세계를 구성하여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리의 희망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그림 7>에서 확인한 경제학자 헤크만의 교육 수익률 곡선을 생각하면 영 유아기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다. 그건 다른 아닌 경제적 이득이며, 이는 당연히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득을 뜻한다.

앞 절에서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에 빚대어 고도로 발전한 자동화 기술을 인간이 노예와 같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렇게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릴 소득 분배 문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는 문제라고도 했다. 따라서 어쩌면 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화를 전수하는 것, 즉 교육받을 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으로써 불평등을 혁신하는 길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설득한다면 새로운 사회계약에 이르기가 쉬울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자. 베나나브(2022)는 근대의 사회계약이 시장경제의 자본주의적 경쟁에 의존하게 된 것을 비판하며 희소성을 향한 경쟁을 벗어나 탈희소성 사회를 상상한 마르크스, 토머스 모어, 에티엔 카베, 표트르 크로포트킨, 오토 노이라트, 듀보이스, 존 듀이, 칼 폴라니 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검토한다(2022:156-175). 그는 이들이 상상한 유토피아적 사회담론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근대 문명이 달성한 성과에도 주목한다. “오늘날은 역사상 가장 교육이 보편화되었고, 가장 도시화 수준이 높으며,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시대(베나나브, 2022: 167)”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베나나브가 오해한 지점이 있다고 본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인간을 전 지구적으로 연결하면서 인간의 뇌를 지구 규모로 키워낸 것(디지털 연결)을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혼동한 것이다. 그는 자동화 경제가 실현된 후를 전제로 ‘자유롭고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사회계약을 제시하는 과거의 방식을 비

판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모두가 존엄성을 보장받는 세상을 ‘먼저’ 가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고민(베나나브, 2022:156)”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점은 놀랍도록 유네스코의 제안과 닮아 있다. 우리가 미래 한국 사회의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성찰하는 데 매우 필요한 사고의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네스코가 학습에 대해, 그리고 학생, 교사, 지식,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2022, 4)과 닮음이 없다. 그것을 통해 우리 인류는 또 한 번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경제적 도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튜링 테스트란 것이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에 견주어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이 테스트는 이제 재정의가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20세기 중반 튜링이 이 테스트를 처음으로 제안했을 때보다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뇌에 대한 지식이다. 우선 인간의 뇌는 기계와 다르다. 기계는 동일한 설계도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구상 모든 인간의 뇌는 완성되지 않은 채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살아있는 내내 환경과 몸의 요구에 따라 회로를 바꾸면서 “우리는 각자 세계가 된다(이글먼, 2022: 348).” 이러한 인간 뇌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성과가 깊어지고 있는 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닮은 신경망 구조로 바뀐 것도 기여했을 것이다. 더구나 과학의 진보로 일부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잠재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는 것이 사회의 미래라면, 리버럴 아츠도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이재인, 2023). 그렇다면 시급한 것은 우리 시대의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즉 자유인의 삶의 기량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고 그 기량을 미래 세대 모두에게 빠짐 없이 가르치는 것을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공교육의 기초로 삼는 일이다.

그런데 교육의 측면에서 인간 뇌의 특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뇌의 가소성(지속적 변화, plasticity)을 ‘생후배선’(livewired)이라 재정의함으로써 인류가 그 개체 수만큼의 다양성을 가졌다고 한 이글먼(2022: 26-27)의 주장만이 아니다. 바로 그 생후배선을 통한 개별화와 고유성이 인간 뇌의 사회적 특성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리버먼, 2015; 던바, 2015; 랠랜드 2023). 이 두 가지 특성이 결합하며 진화해온 인류 문명의 비밀이 창조하는 뇌(이글먼 브란트, 2019)라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창조성과 사회성이라는 인간 본성을 배반하지 않는 교육을 인간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는 경제적 이득을 공동체의 차원에서 해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유네스코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구상할 때 ‘공동의 사회적 행위로서 교육’ 즉 공공의 노력과 공동재로서 교육의 강화를 두 번째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이유일 것이다.

개별화와 고유성은 근대적 개인의 이상을 표현한다(김두환, 2022). 그런데 사회적 통찰은 근대적 인간이 개별화를 통한 고유성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은 그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고 그러한 통찰은 인간의 뇌가 진화해 온 장구한 과정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 뇌의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던바, 2015; 리버먼, 2015; 랠랜드 2023). 불행하게도 자본주의 근대 문명과 함께 해온 사회 집단의 단위로서 근대 국가는 개인이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집단으로서 매우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버크의 주장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현대인에게 ‘사회적(the social)인 것’이 손에 잡히는 구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1980년(국역은 2011년)에 고르가 제안한 자율적 영역이 사적 자유 공간의 실현에 강조점을 찍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고르는 이러한 사적인 자유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예전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집단적 소유와 생산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개인적인 공간은 계획된 프로그램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을 조정하고,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작은 단위 사회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개인 해방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프로젝트는 시장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 고르의 확고한 입장이다(고르, 2011: 120~126). 덧붙여 그는 주거지 근처에 “개인들이 상상력을 쫓아 무언가를 수리하고 자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과 “도서관, 음악실, 영상실”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럴 때 주거지 가까이에서 개인이 만든 방송물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짧은 여행과 커뮤니케이션 활동, 물물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고르, 2011: 141).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단과 공간, 방법들이 자율적인 활동의 확장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을 지지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근린 사회를 강화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바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가 다양성과 개별성을 가진 개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단위임을 의미한다. 거대한 추상적 단위의 사회가 아니라 실제 삶이 영위되는 현장에서 구체적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인류는 협동양육을 통해 가르침(teaching)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문화의 누적적 진화를 달성해왔다는 데이비드 이글먼(2022: 222, 245)의 설명도 주거지와 학교를 둘러싼 동네 수준의 상호작용 밀도를 강화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이 상호작용의 밀도를 사회학자 뒤르켐은 도덕적 밀도라고 불렀다.

사회학자 세넷에 따르면 자부심은 장인 정신의 핵심이다. 그의 저작이 부제를 ‘생각하는 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인간의 손과 생각(뇌)을 연결하는 놀라운 통찰이다. 손의 숙달과 사유를 통해 장인은 지속적으로 원숙해지는 발전을 이루어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장인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진화 과정을 계속한다. 직접 실행하면서 몸에 익히는 과정은 지루하고 느리지만 그 안에서 만족을 발견해 간다. 반복을 통해 숙달하면 그 일은 자신만의 것이 되며 다른 사람이 흉내 내기 어려운 경지에도 도달한다. 훌륭한 외과의사의 손과 미학적 가치를 품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장인의 손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모두 이러한 과정에서 깊게 사색하고 새로움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한다. 그러나 결과를 빠르게 얻어야 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을 깊게 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해 볼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기 어렵다. 그 경쟁이 시험 점수를 향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일을 몸에 익히고 그것에 통달하게 되는 것은 긴 시간 열중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야만 그 일에 관한 장인적 기술이 오래도록 나만의 것이 된다(세넷, 2010: 468). 그러한 열중의 경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앵겔, 2023: 105~114, 130~133).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경로를 개척하는 창의성을 발현하고 그것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미래세대를 키워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도록 하는 일보다 가능한 목표일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매우 다채로운 문화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위에서 본 1980년 고르의 주장은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

들이다(모종린, 2021; 추창훈, 2017). 그리고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창발하고 있는 현상이며, 확대해야 할, 이미 와 있는,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영감을 주는 변화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 경제를 풍부하게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모종린, 2021: 161~163). 이렇게 할 때에만 단 한 명의 아이도 그 잠재적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는, 사각 지대가 없는 교육을 빈틈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생활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창의성이 특별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실증해 내는 교육적 모범을 세계에 내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 교육: 교육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이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교육을 바꾸는 노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학교를 시장 경쟁의 압력에 내맡기지 않는 일(누스바움, 2016; 앵겔 2023)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 교육은 평가, 즉 시험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자도생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들은 교육받은 존재가 아니라 시험 기계가 되어버렸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것에는 서로 대립적인 두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흔히 사회적 수요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시장의 요구라는 명분에 갇힌 생존주의 가치가 그 하나이고, 신뢰와 협력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고유한 자기 생산, 자기 창조와 관계적 측면이 다른 하나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전자에 몰두하면서 협력적이고 상호적인 자기 생산, 자기 창조의 본질을 숨기고 억압해 왔다. 현재 한국 사회의 엘리트가 보이는 퇴행적 행태는 시장 경쟁의 강력한 압박에 노출된 교육에서 승리한 주체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문제는 이들이 창의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는 시험 경쟁의 승리자일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 창의적 역량의 보유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한 계층으로서 엘리트들은 보통의 시민들을 상대로 역 계급투쟁을 벌이는 안타까운 행태를 보

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을 달군 서초동 소재 초등학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사건이 그 극명한 예이다.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할 것이다. 이 드라마의 제목에 있는 스카이(SKY)란 표현이 소위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을 상징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대표하는 학교와 전공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법학과뿐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상층만 등장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차민혁 교수의 말처럼 드라마의 중심은 우리 사회라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이르기 위해 치르는 극단적 경쟁을 보여준다. 본고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승리한 엘리트들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사회 체제에서 승자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기존 체제를 바꾸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이 승자 엘리트들이 그간 자신이 바친 개인적 노력의 대가로 성취의 결과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역시 우리 사회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영어유치원에서 시작해 사립초등학교를 거쳐 선발권을 갖는 사립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명문대학에 안착한 이들은 폭넓게 확대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다. 격렬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이 길을 밟으며 자신들이 치른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 사회가 이른바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사회 복지 체계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경제적 보상이 확실하게 높은 안전한 길로 엘리트로 성장하는 이들이 몰리는 사회적 쏠림을 저지할 사회적 정당성은 허약하게 되고 말았다.

서양의 역사에서 자유주의 전통의 발전을 개인의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시덴토프(2016)은 현대 서양의 자유주의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하나는 자유를 시장경제의 승인 수준으로 퇴화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정신과 참여를 희생시킨 개인주의다. 그 결과 서양 자유주의가 가족과 사적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사생활 속으로 숨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우려한다. 이는 단순히 서양 자유주의의 퇴화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한국도 지난 세기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협소한 가족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가 엘리트 교육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시덴토프는 역사적 추적을 통해 서양의 자유주의가 ‘평등’한 자유의 전통을 발견함으로써 근대적 개인의 발명을 주도했지만, 현재의 자유주의는 사적 ‘자유’에 집중한 나머지 ‘평등’의 가치를 내다버린 꼴이라고 우려한다.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상호성이 근대적 개인의 발명에 중요하게 기여했고 그것이 서양 자유주의 전통의 도덕적 가치이다. 같은 논리로 만약 우리가 창의성을 특별한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관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다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자유를 통해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창의성에 눈감게 되고, 신뢰와 협력의 도덕을 창의성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미래세대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창의성과 사회적 지능이 인간이 진화를 통해 달성한 능력이라면, 현재의 경쟁적 시험에 기초한 교육은 그런 본성적 능력에 반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다양한 삶의 경로를 열어줄 기초이고 그것은 오로지 다른 인간과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실현되는 것이기에 다양한 삶의 문을 열어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크로포드(2022)가 비판하는 인공지능의 배후에 진행되고 있는 추출의 논리나, 2012년 뉴욕타임스 컬럼에서 크루그만이 현재의 기술 진보를 자본편향기술변화로 진단하면서 제안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논의의 시급성, 그리고 아모세글루와 존슨의 최신 저작 『권력과 진보』에서 진단한 기술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쟁투의 문제에서 내세운 기본 주장들은 모두가 현재의 과학기술이 인류를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2023년 전 세계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예를 들어 챗GPT) 기술의 가속적인 진보 양상은 시장 경쟁의 선두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이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시장의 경쟁에 내던져진 개인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대면한 유일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한 엘리트가 한국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성을 기초로 생각하는 공동체에 대한 사유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반성의 계기는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2022)가 탐구한 공동체의 언어적 기원에서 발견한 전복적 내용이다. 요약하면 공동체는 고유한 것을 공통적 요소로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타자가 공통성의 특징이고 그 안에서 주체들이 발견하는 것은 이질성이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공동체는 결핍

을 공통 요소로 한다. 상호-선사(선물주기)의 회로 안에서 ‘~로부터 선사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구성원들의 집합체가 공동체인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승리한 엘리트는 자신들의 승리가 가져다 준 지위와 힘의 정당성이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렵다. 산업의 도구로서, 사회적 지위 성취의 도구로서 격렬한 경쟁에 노출되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도달한 자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이 그 허약함의 증거이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교육 영역 내부의 변화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무는 분명하다. 앞서 필자는 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대한 위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시험 점수로 교육의 성취를 평가하고, 수익이 많이 나는 교육 경력과 직업세계로 이끄는 교육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역경이 커진다고 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집합적 문제 해결의 단초는 유네스코(2022)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면서 강조한, 더 많은 사람들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이들이 교육의 미래 건설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출발이라고 한 말 속에 있을 것이다. 모든 단계의 공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고등교육의 모든 전문화된 전공 교육 과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의 세계이다. 따라서 개인의 고유한 개별화가 가능한 세계임을 전제하는 사회계약이 철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경력의 모든 과정에서 이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 성장하는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누리게 된 혜택에는 깊어져야 할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Ⅲ. 과학

박범순

1. 미래 사회의 과학 문해 -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가. 두 가지 관점: 미래 문해 vs 과학 문해

‘미래 사회의 과학’에 대한 문해의 초점은 미래 사회에 있는가, 아니면 과학에 있는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문제는 ‘미래 문해’(futures literacy)에서 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또는 위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 사회에서의 ‘과학 문해’(science literacy)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일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해가 단순히 읽고 쓰는 기술이 아니라 특정 이슈를 이해하고 상상하며 비판하는 담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담론으로서의 문해

미래 문해의 기본 전제는 이것이 습득될 수 있는 역량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

비하고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실천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미래 예측의 기법은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해석하는 전문적 분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이러한 기법들을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습득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 기관이나 연구소, 기업, 대학 등에서 조직적으로 다년간 수행하는 작업으로, 대체로 일반 시민은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와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이 과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당연히 정치적 편향성도 있을 수 있다. 보다 더 특징적인 점은 최근 미래 담론이 상당히 ‘과학기술 중심적’이란 사실이다.⁷ 이른바 첨단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사회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거의 동일시될 정도로 “오늘날의 미래 담론은 과학기술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문해의 담론적 특성과 과학기술 의존성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예측은 특정 형태의 사회를 옹호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측면에 대해 과학기술학자인 전치형과 홍성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통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말할 때 사실 우리는 현재를 놓고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 미래 예측은 하나의 담론입니다. 이는 미래 예측이 비과학적인 활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단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상업적, 정치적 행위라는 뜻입니다. 지배적인 미래 담론을 내놓은 집단은 그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의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미래 담론에 대한 해석과 비판이 필요한 것은 미래 예측의 적중률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미래 예측이 현재에 대한 통제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미래 담론에서 어떤 미래가 힘을 얻고 있고 어떤 미래가 배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정치의 대상이자 결과입니다.⁸

미래 문해를 강조한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미래 예측의 기법을 배워 저마다 예측 활동에 뛰어들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래 담론의 정치적 특성과 현재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일부 전

7 전치형, 홍성욱, 『미래는 오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어떻게 미래를 독점하는가』(문학과 지성사, 2019), 8쪽.

8 위의 책, 10쪽.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

문가 위주의 예측 영역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쟁의 장으로 끌여오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처럼 중요하지만 피하고 싶은 주제는 도외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유네스코가 미래 문해의 확산을 통해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공론장의 활성화와 확대라고 생각한다.

다. 인공지능 사례

예를 들어, 최근 큰 쟁점으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규제를 위한 논의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미래 담론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예전부터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이 기술이 로봇공학과 결합해 자동 살상 무기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나왔다. 2015년 7월 인공지능 학회에서 이런 방향의 연구를 금지하자는 모라토리엄이 제안되었고,⁹ 이듬해 2월까지 전 세계에서 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이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적 바둑 대결이 이뤄진 2016년 3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때는 논의가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국한되었었지만, 이후 갖가지 정보 조작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안면 인식과 음성 인식 조작, 뉴스 조작과 선거 개입의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국가별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불을 지핀 것은 2023년 초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의 최신 버전이었다. 그 전에는 상상 속에만 있던 문서작성, 창작, 코딩 등의 작업을 몇 초 만에 척척 해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대량 실업의 가능성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었다. 동시에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배경에서 2023년 3월 인공지능 전문가를 중심으로 ChatGPT-4를 넘는 대형 인공지능 실험

9 "Autonomous Weapons Open Letter: AI & Robotics Researchers," Future of Life Institute (2016. 2. 9) <<https://futureoflife.org/open-letter/open-letter-autonomous-weapons-ai-robotics/>> (2023. 10. 1 접속).

(Giant AI Experiments)을 6개월간 유예하자는 제안도 나왔다.¹⁰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2023년 11월 초 영국 정부는 전 세계 인공지능 선두기업의 개발자 100여 명을 컴퓨터 공학의 발상지로 알려진 버킹엄셔주 블레츨리 파크에 초청해 ‘인공지능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엔이 인공지능 자문을 담당할 국제기구를 설치할 목적으로 초청한 각국의 규제기구 전문가도 참여했다(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삼성전자에서 각각 한 명씩 초대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유엔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¹¹ 이에 앞서 배포된 ‘프런티어 인공지능의 미래 위험’¹⁵이라는 자료를 준비한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군사적 목적이나 금융시장의 교란에 활용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것이 신뢰 기반의 인간 사회를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¹² 이런 ‘최후의 심판’ 같은 시나리오에 찬성하거나 반발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전도 함께 벌어졌다.¹³ 리시 수낙 영국 수상은 불안과 우려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¹⁴

10 “Pause Giant AI Experiments: An Open Letter,” Future of Life Institute (2023. 3. 22), <<https://futureoflife.org/open-letter/pause-giant-ai-experiments/>> (2023. 10. 1. 접속).

11 “인공지능 규제 어디로? AI 안보 정상회의의 열린다,” 『한겨레』 (2023. 10. 30), <<https://www.hani.co.kr/arti/PRINT/1114148.html>> (2023. 10. 30 접속).

12 “Future Risks of AI,”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23. 10). 영국 정부가 발간했지만 정부 공식 정책 문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3 예를 들어, “Humanity at risk from AI ‘race to the bottom,’ says tech expert,” The Guardian (2023. 10. 26),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oct/26/ai-artificial-intelligence-investment-boom>> (2023. 10. 26 접속); “AI doomsday warnings a distraction from the danger it already poses, says expert,” The Guardian (2023. 10. 29),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oct/29/ai-doomsday-warnings-a-distraction-from-the-danger-it-already-poses-warns-expert>> (2023. 10. 29 접속).

14 “AI dangers must be faced ‘head on’, Rishi Sunak to warn ahead of tech summit,” The Guardian (2023. 10. 26),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oct/25/ai-dangers-must-be-faced-head-on-rishi-sunak-to-tell-tech-summit>> (2023. 10. 26 접속).

그림 3-1. 2023년 11월 1일과 2일에 영국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안전 정상회의” 로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류의 실존적 위험과 규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가 열리는 과정을 ‘미래 사회의 과학 문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마치 국가 지도자들의 회의를 연상시키는 ‘정상회의’라는 타이틀에서 알아차릴 수 있듯, 일반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회의이다. 이런 방식의 ‘정상회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지만, 이미 인간 유전체 편집(Human Genome Editing) 분야에서는 여러 번 개최된 바 있다. 유엔의 인공지능 자문회의 개최는 국가별 규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것도 규제 전문가 중심의 회의이다. 둘째, 이 ‘정상회의’는 사실상 인공지능의 규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주요 기업과 국가들의 각축장이 됐다. 저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국제협력의 절차를 정하고 표준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다. 영국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EU에서 탈퇴함으로써 얻은 지위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¹⁵ 셋째, 각 기업과 국가는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가져올 위험과 함께,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논의는 과학기술적이며 정치적이다. 이렇듯, 미래 문해는 과학 문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현실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15 “영국서 열리는 ‘AI안전’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이데일리이코리야』 (2023. 10. 27), <웹 주소><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31> ; “인공지능 규제 어디로? AI 안보 정상회의 열린다,” 『한겨레』 (2023. 10. 30), <<https://www.hani.co.kr/arti/PRINT/1114148.html>> (2023. 10. 30 접속).

2. 과학과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

가. 과학 문해 개념에 담긴 미래

미래 담론에 과학기술과 현실 정치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은 ‘과학 문해’(science literacy) 개념의 연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과학 역시 시민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지식이라는 관점은 미소 대립의 냉전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나왔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던 미국은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개발해 지구 궤도에 안착 시키자 큰 충격에 빠졌다.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라 스푸트니크 쇼크(Sputnik Shock) 이라고 불린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과학교육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다. 1958년 한 교육학회지에 나온 논문에 처음으로 제시된 이 개념은 단순히 일반 대중이 과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었다. 즉, “과학의 발전을 사회가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연속성(a great discontinuity in scientific and social development)”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특히 ‘우주 시대’(space age)의 개막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큰 도전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⁶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사회의 발전 속도를 앞선다는 이 관점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특정 관점, 즉 단선적인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의 입장을 옹호한다. 과학기술이 미래에 대한 결정적 요소라는 인식은 냉전 시대에 더욱 공고해졌다. 사실 과학 문해는 교육학계에서 복잡하고 규정하기 어려우며 양적으로 정의하기 힘든 개념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교육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과학 문해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측정 방법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¹⁷

16 Paul DeH. Hurd, “Science literacy: Its meaning for American schools,” *Educational Leadership* (October 1958), pp. 13-16, 52. 이 논문의 저자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학자이다.

17 Rudiger C. Laugsch, “Scientific literacy: A conceptual overview,” *Science Education*, 2000, 84:71-94.

나. 대중의 과학 이해

‘과학 대중화’(popularization of science)는 정의하기에 따라 그 연원을 18세기 계몽 사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미국에서도 과학의 실용성을 강조한 다양한 협회와 잡지가 나왔다. 과학 문해의 접근법과는 다른,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전부터 과학을 문화의 한 형태로 보는 전통이 매우 강한 나라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지식을 잘 전달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과학 대중화의 노력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왕립학회는 1985년에 발간한『대중의 과학 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¹⁸ 일상생활에 깊게 스며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 판단뿐 아니라 공적 판단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즉, 개인과 국가의 생존에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다. 미래 담론에 과학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대중의 과학 이해’ 접근법은 과학자가 전문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결핍 모델(deficit model)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학 문해 접근법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이 학생을 위한 정규교육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그 대상을 전 연령, 전 사회 계층의 대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과학 문해를 통한 교육 혁신을 꾀한 미국의 접근 방식과 차별성이 있었다. 그리고 과학 대중화의 주체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중의 과학 이해 증진 노력이 일부 관심 있는 과학자들 또는 연구 전성기를 지난 과학자들의 여가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산업계, 대중매체, 최첨단의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18 Royal Society,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985), <<https://royalsociety.org/topics-policy/publications/1985/public-understanding-science/>>.

다. 근본적인 관점 변화: 과학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2000년 영국 상원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과학과 사회』 보고서에서 이전의 ‘과학 대중화’나 ‘대중의 과학 이해’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¹⁹ 대중을 과학으로 계몽되어야 할 수동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식 생산의 중요한 파트너로 본 것이다.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학 대중화나 과학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점에 기반을 둔 이러한 관점은 광우병 사태와 GMO 파동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거치면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 과정에 대중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즉, 일반 시민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논의하며, 대안적 상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과 사회, 또는 과학자와 시민이 지식을 ‘공동생산’(co-production)하고 함께 진화한다는 ‘공진화’(co-evolution)의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와 함께하는 과학, 과학과 함께 만드는 사회’(science with society, society with science) 등의 정책 지향을 제시했다.²⁰ 현재 나노과학, 인공지능,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인공배아연구, 뇌신경 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 ‘기술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 등 실천적이고 정책적 개입을 강조한 것도 이런 관점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안전에 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 과학기술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큰 방향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록 이들이 가능한 투명하고 솔직하며 책임감 있는 의사 전달을 약속하지만, 기술 자체는 점점 블랙박스화되는 경향이 있다.

19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Society* (2000).

20 과학과 사회의 공동생산, 공진화와 관련해서는 Sheila Jasanoff, ed.,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Social Order* (Routledge, 2006)을 볼 것.

3. 한국 사회에서 미래 담론과 과학기술

가.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과학기술

한국에서는 식민 지배 극복과 6.25전쟁 이후의 국가 건설이라는 대명제 속에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가 맺어졌다. 즉, 발전주의 또는 개발주의의 거대 담론 속에서 과학기술은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 내세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선진국의 발전 모델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습득해 추격하는 ‘추격형’(catch-up) 전략이 최근까지 선호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미래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상상되었고 독립, 자주, 추격, 선도와 같은 단선적 역사 발전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자주적 공업화를 위해 과학운동을 주도한 김용관의 사례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그는 1924년에 발명학회를 설립해 과학 및 공학에 관한 도서와 잡지를 출판하고 발명특허 수속을 도와주며 공업품 제작·판매와 공장 설계 등을 계획했다. 또 한국 최초의 과학잡지인 『과학조선』을 창간해 ‘과학의 민중화’를 내세우며 사회개혁을 위한 문화운동을 이끌었고, 발명학회 회원들과 함께 1934년 제1회 ‘과학데이’ 행사를 거행했다. 이 행사 이후에 결성된 ‘과학지식보급회’의 발기문에서는 ‘전 조선 사회의 과학적 재편’의 과제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이천만 조선민중은 생활을 요구한다.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학을 요구한다. (...) 과학은 자연법칙의 현시자요, 현대생활의 지휘자요, 공업의 안내자요, 수확의 증가자요, 질병의 정복자요, 미신의 타파자다.”²¹

21 자세한 내용은 박범순, “과학기술중심사회란 무엇인가?,” 창비 주간논평(2022. 4. 20), <<https://magazine.changbi.com/20220420/?cat=2466>>.

사실상 해방 전 과학운동은 민족자강운동이었고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해방 후에도 상황은 금방 좋아지지 않았다.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과학기술자가 부족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월북했다. 6·25전쟁 이후 1957년 원자력 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바람이 일었으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생태계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십 년 후인 60년대 말부터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1966년에 설립된 것을 필두로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968) 등이 생겨났고, 1971년에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전신인 한국과학원(KAIS)이 설립되었다. 모두 국가의 발전, 특히 경제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나. ‘과학기술 중심사회’ 담론 등장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라는 정책 기조 아래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 이때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이후 정권에서 과학기술부총리제는 사라졌고 그나마 과학기술부의 조직이 교육부 또는 정보통신부와 합쳐지거나 쪼개지면서 독립성마저 애매해졌다. 과학기술처 출범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할 명분이 약화된 것이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란 무엇인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후보자 시절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기존의 과학기술보좌관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 자리를 마련하는 개편을 했다. 과학기술수석 신설 또는 과학기술부총리제의 부활을 점치던 과학기술계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²² 그리고 최근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삭감안이 발표되자 이공계 학생들부터 크게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²³ 조직과

22 “윤석열 정부, 과기보좌관 폐지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후퇴,” 서울경제 (2022. 10. 5),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8E9188G>>.

23 “젊은 연구자들 ‘R&D 예산삭감 납득 안간다’ 헬로디디 (2023. 10. 24),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19>>.

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은 이전보다 후퇴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다. 한국은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아닌 적이 없다?

정부 조직과 예산은 정부가 다뤄야 할 이슈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라는 명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만 따로 떼어 각료급 부처를 두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예를 들어 미국에는 없다),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은 여전히 GDP 대비 세계 초상위권이다. 핵심은 ‘더욱 더’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있다. 심지어 IMF 경제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설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금 길게 보면 적어도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을 더 간절히 원할수록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규모는 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학기술과 사회가 공진화하는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좁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진지한 질문이 부족했던 것 같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미래 담론은 처음부터 과학기술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상상을 좁게 만들어, 오히려 과학기술을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과학기술 본연의 가치를 더 깊게 파고들고, 다른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4. 유네스코에서의 미래 담론과 과학기술

가. 평화 구축을 위한 과학

유네스코 안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1945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오로지 정부 간 정치적·경제적 타협에 근거한 평화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네스코가 진정한 국제 평화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추구한다면, 과학을 빼놓고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 2차대전에서 증명되었듯 과학은 전쟁의 시작과 종결 모두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유네스코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과학자인 줄리앙 헉슬리를 선임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1948년 10월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도 모든 사람이 과학의 진보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과학의 이중적 사용(dual use)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여 유네스코는 2017년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관한 권고’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발견과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응용은, 특히 인류의 이익과 평화 유지,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한 과학과 과학적 방법의 최적 활용을 통해 큰 진보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엄청난 규모의 파괴를 가져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인류의 근본 이익에 상치되는 일에 사용되거나,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인권 또는 기본적인 자유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손상을 입히거나, 윤리적 또는 법적인 복잡한 문

제를 야기하는데 사용되었을 경우 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27조 1항)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는 과학을 국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로, 그리고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한 공공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냉전 시기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설립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Organisation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와 국제이론물리센터(ICTP, 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의 탄생에 기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다국가 연구소, 연구네트워크, 지역연합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²⁴ 환경, 보건, 농업과 식량 등 과학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유엔 산하 다른 기구와는 차별성이 있었다. 즉, 유네스코는 국제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기초과학, 공학 등), 과학 정책 공유, 개도국 과학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고, 여기에 해양·물·생태·지구과학 등 국제 협력이 필수인 전문 영역의 일도 맡게 되었다. 이 중에서 자연 보전을 위한 사업, 예컨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은 생물다양성과 지질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과학 분야 유네스코 일은 다부처 사업일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교육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관여해 왔는데, 이는 유네스코 사업이 가진 장점이자 어려운 점이기도 했다. 단순히 다부처를 상대해야 한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부처의 업무가 정렬될 경우, 유네스코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24 배영자, 이우성, 명수정, 김은영, 이수연, 『유네스코 과학분야 기여증진 방안 연구보고서』 (외교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7), 7-20쪽 (김은영, 「유네스코 과학사업과 그 성과」).

나.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적 관점

유네스코는 설립 초기부터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해, 『Impact of Science on Society』를 1950년부터 1992년까지 발간했다. 한국에서는 『과학과 사회』란 이름으로 번역 편집본이 1984년부터 1995년까지 발행된 바가 있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관점은 성장 일변도의 길을 걷고 있던 한국 정부의 개발주의 이념과는 다른 미래 담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런 점에서 유네스코는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과 사회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위험과 재해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적 담구를 지원하고 퍼뜨리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나 출판물, 과학관과 박물관을 활용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과학 대중화에도 힘썼다.

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1990년대에 들어 유엔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유네스코는 과학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유네스코 과학보고서를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세 차례 발간했고, 2005년부터는 5년마다 발간하면서 전 세계에서 과학이 어떻게 지역의 사회와 환경문제에 활용되는지 조사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2021년 7차 과학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연계를 통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강조했다.

라. 생명윤리와 인공지능 윤리

유네스코가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의 수행에서 과학기술을 도구적으로 보았다면,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성찰적 관점에서 작업을 해 왔다. 예컨대 1970년대부터 생명윤리에 관여하면서 국제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1997년에 「인간 게놈과 인권

보편선언」을 채택했고, 2005년에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을 승인하면서 생명윤리와 보편적 인권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1993),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1998),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1998) 등을 설립해 제도적으로 생명윤리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논의될 수 있도록 도왔다. 2021년 유네스코는 총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규범 틀을 제시한 첫 번째 사례이다.

마. 대안으로서의 유네스코 미래 담론

유네스코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미래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를 ‘아이디어의 실험실’로 규정한 것은 옳다. 하지만 앞서 인공지능의 최근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배적인 기업과 국가의 연합체(complex)에서 쏟아내는 각종 기술적·제도적 전문지식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미션이 아닐까? 정치적·경제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평화를 거부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파괴적인 상황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타협도 단호히 거부하고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도덕적·지적 연대가 이를 위한 수단이라면, 각 지역에서, 각 국가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이해와 우려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5. 미래 메가트렌드(megatrends)에서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로

가. 2020년 유엔 보고서

최근 국가별로, 지역별로, 기업별로, 단체별로 메가트렌드 분석이 나왔는데, 2020년 유엔이 경제학자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한 보고서를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다음 5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기후변화,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공해
- 고령화 세계에서 인구구조 변화 추세
- 도시화
- 신첨단기술(emerging and frontier technologies)
- 불평등



첫 번째 항목에서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 감소까지 포함한 범주이고, 공해(pollution)는 일반적인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및 생활 폐기물(waste)도 포함했다. 다섯 번째의 불평등 항목은 불평등의 변화 추세와 원인을 함께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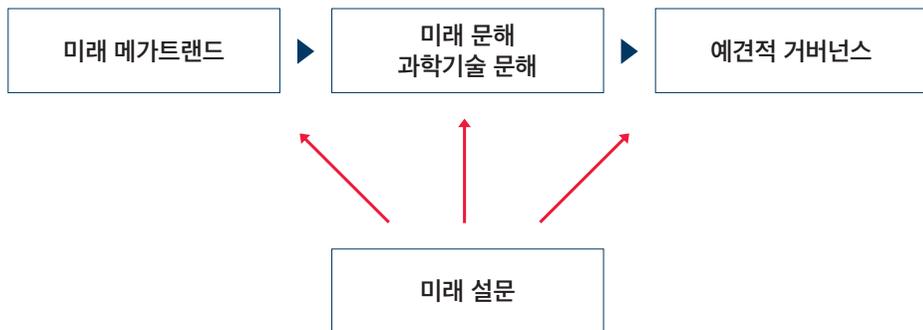
나. 미래 설문 범주

유엔 보고서의 다섯 가지 항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화를 빼고 4가지 항목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항목을 다룰 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에 유네스코가 채택한 「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권고」를 참고할 것이다.²⁵

2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권고』(2018), 번역본.

다. 작업의 개념도

설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미래 메가트렌드, 미래 문해/과학 문해, 예견적 거버넌스 등 3단계로 나누었다. 여기서 예견(anticipation)이라 함은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prediction)하거나 예상(foreseeing)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상황에 대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도 생각하는 실천적 해석을 말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궁극적 목적은 예견적 거버넌스, 즉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상상하고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금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를 도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6. 설문의 구조

가. 기후변화: 인간-자연(지구) 관계

- 지구촌이 탄소중립에 성공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 강, 산과 같은 자연물에 인간의 소유권이 아닌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을 위해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 연구인력 변화에 초점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학부생, 대학원생, 포닥 등 비교적 젊은 연구인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현상 또는 문제는?
- 선진국으로의 두뇌 유출이 심해질 것인가?
- 실험의 자동화가 가속화 될 것인가?
- 연구지원 인력(테크니션)의 고용이 더 중요해질 것인가?
- 실험실 간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인가?

다. 신첨단기술

- 생명의료 분야 (인공 배아, 뇌과학, 합성생물학)
 - 인간 배아를 사용한 연구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면 허용할 것인가?
 - 인공 배아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배아와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이때 인공 배아에 대한 생명윤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 한 번의 뇌 영상촬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환영할 것인가?
 -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생각으로 컴퓨터에 명령을 보내 휠체어의 이동과 같은 어떤 기계적 작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까?
 - 뇌에 기억된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뇌에 이식할 수 있다면, 인간의 실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 인간에게 해로운 말라리아 매개 모기와 같은 곤충을 유전자 조작의 방법으로 멸종시킬 수 있다면 실행해도 될까?
 - 미생물을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의약품, 산업재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써도 될까?
- 로봇공학, 인공지능: 인간-기계의 관계
 -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인격 또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 인간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로봇의 제작, 생산, 판매, 사용, 처분의 전 과정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밟아도 될까?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개발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라. 불평등과 거버넌스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인가?
- 거버넌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마. 과학기술과 국가

- 과학기술의 발전이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바. 과학기술과 가치

-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가치체계에 줄 변화는 무엇인가?

IV. 문화

한준

1.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19세기 이후 등장한 단어이지만 20세기 들어 문화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문화예술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기반해서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문화예술적 취향을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단어로 부르면서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 생산과 재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정치학자인 나이(Joseph Nye)는 국가 간 관계에서 국방이나 경제 외에 문화적 영향력과 매력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정체성이 등장하고 다양한 인종과 종족 집단이 섞여 살게 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중요해지면서 그 필요성을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문화는 20세기의 그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화가 이처럼 중요해지고 사회의 많은 문제에서 문화적 측면이 중요해지면서 ‘문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또한 중요해졌다. ‘문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은 문화가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맺는 관련성 때문이다. 문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무렵부터 문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들

두 의미는 서로 관련되면서도 분명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어 왔다.

문화의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로서 ‘문화예술’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을 포괄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사회의 제도화된 하위 분야로서 존재한다. 이 제도화된 분야에 속한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문화 생산자로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매개자, 문화소비자로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소수의 좁은 범위에 한정되었던 제도화된 문화예술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21세기 들어 사회의 더 광범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문화가 사회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면, 반대로 넓은 의미의 문화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되고 또한 사회의 모든 측면에 걸쳐 있다. 이때 문화는 제도화된 예술과 문화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 생활양식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거나 사회적 분업에서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 생활양식을 공유한다. 사회적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체성이 등장하고, 글로벌화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과 종족 집단의 이동과 교류가 늘면서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높아진다. 더 나아가 이들 다양한 문화의 표현으로서 문화예술 또한 다양해진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문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는 문화를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함하는 사회 또는 사회 집단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및 정서적 특징의 집합”(UNESCO, 2001)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의 앞부분은 보다 통상적으로 문화로 이해되는 제도화된 분야로서의 문화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뒷부분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의 생활방식, 신념과 가치체계를 언급한다. 유네스코가 이처럼 문화를 두 가지 의미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문화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의 문화에 대한 포괄적 정의에서 출발해서 한국 사회의 문화가 향후 2-30년에 걸쳐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미래의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미래의 문화에 대한 전망을 기술하기에 앞서,

문화와 미래의 관계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어떤 질문들을 문화의 미래에 대해 제기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와 미래

문화와 미래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프레임을 제시하기에 앞서 문화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배경을 문화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때 중요한 문화의 특성은 그 시간성 혹은 역사성, 변동성과 관련된다.

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 특히 인문학과 인류학적 연구들에서는 문화를 인류가 살아오면서 집단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또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본다. 우리가 문화재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향유하거나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가 모두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산물이다. 과거를 살았던 우리 사회의 앞선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과 직면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집약된 것이 현재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마치 생물의 유전자와 유사하게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를 이어주는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역사적 전통이라는 것이 정체성의 기반이 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내용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네스코가 그동안 내놓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권고에서 강조했던 문화적 유산의 보호는 바로 이러한 문화의 역사성을 적극적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는 역사적 경로로 인해 결정되는 것도, 과거에 정해진 방향과 경로를 바꾸지 않고 지속하는 것도 아니다. 문화는 과거의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문화적 혁신이란 바로 이러한 과거 경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문화 분야에서는 이러한 혁신을 강조하고 찬양하며 권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혁신이 중요해지는 것은 과거의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이 새로운 현실이나 경험과 서로 맞지 않게 될 때이다. 문화가 이러한 문화적 혁신에 의해서만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 사회처럼 문화적 확산과 교류가 늘고,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

황에서는 문화 간의 접촉 기회도 늘고 있다.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은 또 다른 혁신의 계기 혹은 필요가 된다.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이 같등이나 배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적 혁신을 자극한다. 결국 내적인 필요에 의해서건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건 문화는 혁신과 변화를 요구받는다. 물론 이러한 요구에 문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개인적, 집단적 문화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더 나아가 사회가 이러한 혁신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지도 중요하다. 유네스코가 문화에 대해서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문화적 창조와 혁신의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러한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인류 미래에 대한 도전이 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더 잘하자라는 취지에서 미래 문해(future literacy)라는 개념을 제안해 왔다. 이때 미래 문해는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주요 변화의 동인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미래 연구에서는 미래를 크게 가능한(feasible) 미래와 바람직한(desirable) 미래로 나누어 생각한다. 가능한 미래란 현재의 추세 혹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의 동인들에 의해 예상되는 객관적 미래이다. 가능한 미래와 관련하여 미래 문해는 곧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함께 미래에 예상되는 부정적이거나 위대한 변화를 어떻게 피하거나 줄일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관심은 현재의 가치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미래는 객관적 환경이나 상황 변화의 결과인 동시에, 주체가 개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주체들의 전망과 함께 주체들이 원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가치의 문제이다.

가능한 미래를 중심으로 문화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문화의 미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둘째, 미래에 문화를 위협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직한 미래를 중심으로 문화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적 가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향

후 문화적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집합적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와 깊이 관련돼 있다. 둘째,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문화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바람직한 문화적 가치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를 위해 문화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돼 있다.

이제 이러한 두 측면에서 미래의 문화와 관련하여 미래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영향을 미칠 변화의 동인(driving force)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동인들에 의해 나타날 미래 문화의 변화 양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미래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인

미래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동인들을 기술적인 것과 사회·경제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가. 기술적 동인

미래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동인으로는 크게 ▲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 인공지능의 발전 ▲ 메타버스의 실용화와 가상현실 ▲ 생명과학의 발전과 생명 연장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인류 역사에서 컴퓨터의 등장은 20세기 중반이었고, 인터넷이 보급된 것도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빠르게 일어났지만,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에 이어 디지털 전환 혹은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21세기의 첫 십 년

이 지난 뒤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킨 기술적 발전과 서비스의 보급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

첫째, 사물 인터넷의 확대에 따라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인간이나 사물의 상태와 움직임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축적하게 되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은 수많은 인간 주변의 사물이나 기계, 디바이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통제가 가능해지게 만들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신의 생활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처럼 사물 인터넷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활용되면서 기계학습이 가능해졌다. 빅데이터는 단지 데이터의 규모나 양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정형적인 자료로서 기존 자료와 달리 인간의 환경 통제와 자동화를 위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갖는다. 빅데이터는 수치나 활자뿐 아니라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셋째, 빅데이터를 저장할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확대와 활용에 의해 데이터 저장장치를 인간들이 휴대하고 다니거나 현장에서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선 인터넷의 속도와 안정성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접속과 활용이 일반화되었다.

넷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결합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폭넓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때 디지털 플랫폼이 이들 인프라를 결합하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결합으로 가능해졌으며, 이용자들이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디바이스의 등장에 의해 가능해졌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대단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미디어로서 플랫폼의 가능성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는 단지 대중매체나 소통수단이 아닌, 소통과 경제 거래와 정보검색, 활용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낳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를 들어 보면 오프라인, 온라인만이 아닌 모바일 쇼핑과 거래가 가능해졌고,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 소유에 기반하지 않고 공유

자원への 접근과 활용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가능해졌으며, 일의 형태 또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 중심으로 일의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매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폭넓은 활용이 문화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문화 콘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나 영상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존의 기술적 변화에 덧붙여 이러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플랫폼이 검색, 추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예술의 매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첫째, 문화 소비자 혹은 플랫폼 이용자에게 있어 폭넓은 문화적 접촉과 교류 및 풍부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둘째, 문화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쉽게 창조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스포티파이나 아이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광범하게 보급되면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측면에서의 변화는 유튜브 등을 통해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창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사람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문화적 매개, 즉 공연이나 전시, 라디오나 TV 등에서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건너뛰어 직접적인 연결과 접근이 가능해지고 일반화되었다. 이는 문화 생산자가 자신의 실력에 따라 혹은 관객으로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정적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첫째, 문화산업에서의 탈매개화(disintermediation) 결과 생산자에게 기회가 확대되지만 실제 이 기회를 살려 인정받고 성공하는 생산자는 소수로 줄어들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문화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겨냥한 상업주의가 강화되었으며, 둘째, 문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가 생기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 특성상

반향실 효과(echo-chamber effect) 때문에 자신의 기존 취향을 강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고 즐겨찾는 콘텐츠로 선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먼저 문화산업에서의 탈매개화의 결과 편집자, 프로듀서, 비평가 등 기존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대중 소비자를 대신해 문화 콘텐츠를 추천함으로써 이들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던 것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자에게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인정과 성공을 누리는 생산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문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콘텐츠에 제한될 경우 취향과 선택의 다양화가 아닌 취향과 선택의 제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2) 인공지능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 역시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관심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고, ‘알파고’의 충격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혹은 경쟁이라는 문제의식도 201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 디지털 전환 이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사고와 연산의 규칙을 재현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2010년대 알파고의 성공은 이전과 달리 이른바 기계학습이나 심화학습, 즉 인간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학습을 함으로써 인간보다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고나 판단을 복제하기보다는 이를 학습하고 그에 기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 한계란 첫째, 인간이 과거의 평가나 판단, 의사결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계에 이를 학습시켜 특정한 형식의 투입과 산출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둘째로는 인간이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글이나 이미지, 소리 등 자유롭고 유연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기계는 정해진 형식과 내용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이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존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이었다. GPT의 의미는 인간이 투입이나 산출물의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간의 자유로운 언어적 표현으로 질문을 하면 기계가 인간에게 친숙한 언어 등의 표현 수단으로써 유연한 응답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생성형의 의미가 인간에게 친숙한 형태로 해답을 생성한다는 것이라면, 사전훈련(pre-trained)의 의미는 온라인의 광범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해서 어떤 질문에라도 이를 기반으로 답한다는 것이다.

GPT가 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이유 때문이다. 기존의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주로 활용된 곳은 공학적, 경제학적 질문처럼 주어진 전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나 분야이다. 금융 분야의 보험이나 투자처럼 과거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축적되었거나, 공학 분야에서 복잡한 계산이나 연산이 필요하고 분석적으로 해답을 얻기 어려운 조건에서 기존 결과들을 토대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인공지능은 활용도가 높았다. 반면 문학이나 음악, 미술 등에서는 기존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명확한 형태의 답보다는 문자를 이용한 글, 이미지를 이용한 미술, 음향을 이용한 음악처럼 인간에게 직관적으로 익숙한 형태의 자유로운 창작물이 요구된다. GPT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GPT가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의 산물인 문학 텍스트, 음악 작곡, 미술 그리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들 분야에서 GPT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제공한다.

첫째로 GPT 등장 이전까지 문화적 산물이란 인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적 생산물로서 인간 고유의 것으로 여겨졌다. 기존의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답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겼다. 인간의 역할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기계가 답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한 질문에 대한 특정한 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면 GPT는 인간에게 친숙하고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활동인 글 쓰기, 음악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을 인간과 구별되기 어렵게 수행한다. 인간을 대신

할 수 있는 영역이 기존에는 인간 고유한 분야라고 생각했던 문화 분야로 넓어진 것이다. 수리적 계산이나 논리적 판단은 기계가 할 수 있을지라도 문화적 창조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생각이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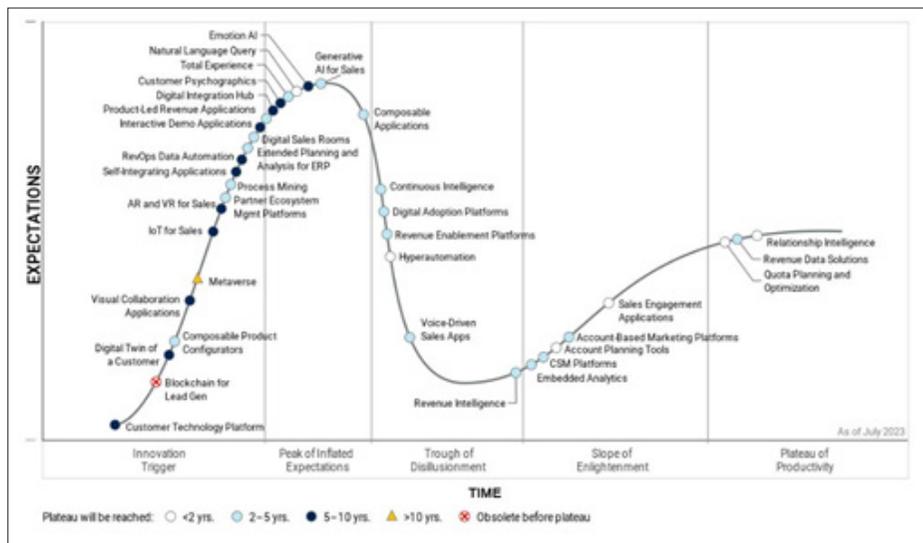
둘째, 이처럼 문화적 산물로서의 콘텐츠를 인공지능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게도 정신적 산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 이전에 저자 혹은 창작자로서 인공지능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인공지능이 문화적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이를 창작물로 인정한다면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학습한 기존의 인간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인정 혹은 고려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문제가 단지 추상적 가능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해외 학술지들에서 GPT를 활용해 작성한 논문에서 GPT를 공동 저자로 적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간과 매우 흡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문화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GPT의 가능성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GPT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진실에 훨씬 근접한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GPT는 인간이 생산한 온라인 상의 많은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오히려 이를 강화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간이 지닌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GPT에 의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대로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작동방식 때문에 인간의 확증편향 혹은 반향실 효과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GPT의 편견과 선입견이 강화된다면 인간의 문화적 삶과 소통에는 편향적 오류와 함께 혐오, 갈등의 소지가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최근 GPT의 열풍이 불면서 그에 밀려 관심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메타버스(metaverse)는 2020년대 디지털 기술들 중에서 매우 큰 관심을 모은 기술적 혁신이었

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디지털 기술 예측 및 컨설팅 전문기관인 가트너(Gartner)에서 주기적으로 제시하는 미래 디지털 기술에 대한 S자형 과잉기대(Hype) 주기 그래프의 2023년 버전이다. 여기에서 GPT 인공지능은 거의 실현에 가까운 것으로 예측된 반면 메타버스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의 변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활용이나 관심의 집중이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역시 인간의 삶과 집단적 경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세상으로서의 유니버스(universe)와 달리, 기술적으로 구현된 대안적 혹은 병행적 세상이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술적 토대는 가상(virtual) 혹은 증강(augmented) 현실을 제공하는 기술들이다. 우리는 현재 대부분의 컴퓨팅이나 인터넷,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로 모니터가 되었던 아니면 스마트폰이 되었던 윈도우 형태의 스크린과 스피커 혹은 이어폰(헤드폰)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한 텍스트이든 이미지이든 소리이든 하나의 창을 통해 현실과 명백히 구분되는 프레임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

와 달리 가상 혹은 증강 현실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세상의 경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가 아닌 현실을 벗어난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의 매체는 현재의 모니터와 스피커 혹은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아닌 우리의 시각과 청각, 그리고 신체감각 전반을 포괄하는 헤드셋을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SF 영화 ‘토틸 리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과 이를 구현할 디바이스를 통해 가상의 세상에 푹땀 뛰어들고 이를 전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메타버스는 인간이 직접 경험하기 쉽지 않은 비행기 조정이나 우주선 조정, 심해나 전쟁 등과 같은 극한적 경험에 대한 모의 훈련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가상의 스토리와 무대, 등장인물을 토대로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에 실험적으로 활용되는 정도이다. 하지만 메타버스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그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넓어지게 되면 인간의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메타버스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예컨대 경제적 소비 영역에서 현재 사람들은 머리 속으로 상상하면서 옷을 입어보고, 차를 시승하고, 음식을 맛보는 등의 시험적 경험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옷을 입고 거리를 걷거나 사람들과 만나고, 차를 운전해 멋진 자연이나 험난한 주환경을 경험하고, 음식의 맛과 냄새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통의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멀리 있어 만나지 못하고 음성이나 화상으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와 바로 옆에서 함께 대화하도록 해 줄 수도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오지나 사고 현장에서 긴급하게 의사의 진찰과 조치,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그 기술적 가능성과 현실적 적용과 활용범위 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문화이다.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제공할 새로운 변화의 중요한 내용은 문화적인 것이다. 특히 문화의 역할이 사람들의 인지적 지식뿐 아니라 감성적, 감각적 표현을 포함하며, 사람들의 직접적인 현실 경험을 벗어나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가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메타버스 기술의 실현은 인간의 감각 경험에 대부분 의존하는 현재의 문화, 예술의 지평을 크게 확장할 전망이다. 시각예술인 미술의 이미지와 청각예술인 음악의 소리, 이들을 결합한 영화나 연극과 같은 종합예술이 제공하는 경험, 그리고 이들의 토대가 되는 문자 예술로서 문학의 상상력의 확장이 하나로 종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의 문화와 예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문화와 예술의 구분을 허물어버리고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새로운 창의성과 상상력의 발휘를 촉진하고 기술적 혁신에 기반한 문화적 혁신의 거대한 흐름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 의해 새로운 문화적 혁신과 융합적 발전의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메타버스로 인해 부정적이거나 우려되는 변화의 전망 역시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앞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딥 페이크(deep fake) 기술과 결합되면서 현실을 가상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날 혼란과 갈등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의 문화와 예술은 현실(reality)에서 벗어난 상상력의 세계를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으로 제한된 감각에 기반해서 현실과 명확히 구별되는 프레임 속에서 경험하도록 해 준다. 또한 이들 문화적 산물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명확히 현실과 구별된다. 영화, 무용, 연극, 음악 등 공연예술은 시간적으로, 또한 미술과 같은 전시예술은 공간적으로 현실과 구분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화와 예술은 모두 현실의 일부 혹은 현실에서 살짝 벗어난 가상이 아니라 현실을 대체하는 가상의 세계로서 경험될 수 있다. 이때 인간의 현실 감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현실과 가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현실감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왜곡되고 조작된 경험을 주입한다면 우리의 혼란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4) 생명과학 발전과 생명 연장, 복제

디지털 기술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생명과학 분야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생명과학이 결합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 기술이 생명과학의 실험의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의료 물질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인간 유전자 정보의 처리와 해석 속도를 디지털 컴퓨터로 가속화하기도 하는 등 두 기술의 시너지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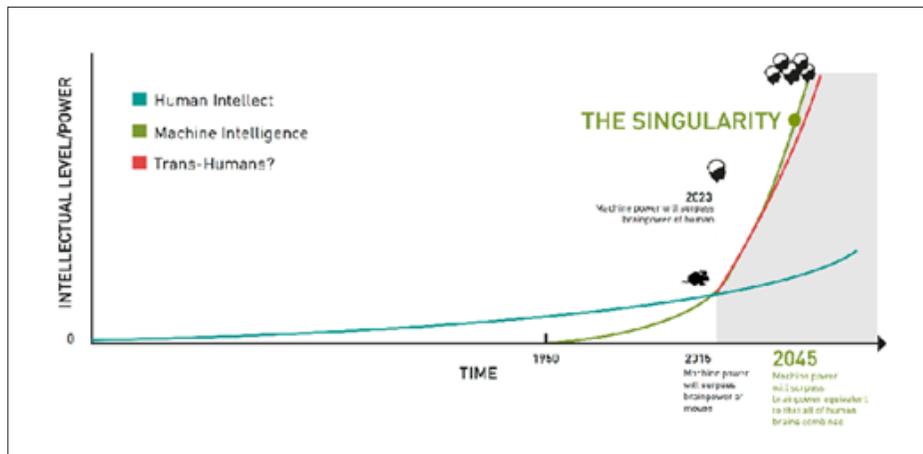
아마도 생명과학 기술이 인간의 오랜 열망 혹은 욕망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또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생명 연장과 복제가 아닐까 싶다. 호모 사피엔스로서 지적 능력이 빠르게 높아져 스스로에 대해 자각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장수에 대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생명 연장에 대한 열망은 반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대비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고대 제국의 지배자들은 영생을 가능케 하는 음식이나 약물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도 했다. 종교 역시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영생을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다. 근대 이후 과학의 발달은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보다 현실화시켜서 진단 기술과 치료 기술, 그리고 항생제 등의 새로운 의약품질의 보급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지속적으로 연장시켜 왔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자연 수명을 늘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런데 최근 생명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인간 수명의 연장에 도전하게 되었다.

인간 수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시계적 장치에 의해 통제되며,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되는 것은 바로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정보의 작동 결과라는 것이 생명과학의 연구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의 정보, 그리고 그에 따른 노화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이를 기술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최근 생명과학의 대담한 시도인 것이다. 유전자 정보를 교체하거나 재프로그램화해서 인간의 노화를 늦추려는 노력이나 노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는 장기들을 인공 장기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생명과학은 인간이 자연이 부여한 수명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려 한다.

그런데 이처럼 생명과학의 인간 수명에 대한 개입 시도가 지속되면 될수록 이러한 시도는 인간의 복제라는 문제와 결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의 복제는 유전자를 통해서 동일한 인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노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장기들을 양성해서 이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장기와 대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의 복제에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기술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뿐 아니라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실적 이용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그런데 장기 교체나 유전자 개입 등에 의해 생명이 연장될 경우, 우리는 연장된 삶을 누

리는 존재가 자연과 인공, 인간과 로봇의 경계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듯 인간의 장기를 교체하게 되면, 인간의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담당하는 뇌까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생명의 한계에 근접한 인간의 뇌를 다른 젊은 인간의 몸에 이식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의 과학기술 전망서들은 이처럼 생명과학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속도를 추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추월이 일어나는 시점을 특이점(singularity)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특이점의 의미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시점이 이미 특이점이 지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마다 특이점으로 이야기하는 시점은 다르지만 그것이 현재 시점을 전후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철학에서는 이러한 특이점을 지난 시점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포스트 휴먼은 짧게는 르네상스 이후, 길게는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 이후부터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시기를 지나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인간이 모든 문화적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이 되

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시 예측과 조정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시점이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디지털의 관점에서 『호모 데우스』(Homo Deus)란 책에서 논한다. 그는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과정을 인간이 데이터로 변해버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문화의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한대로 GPT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문화적 생산과 창작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한 메타버스에 의해 문화가 그동안 인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던 감각과 경험의 현실을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인간 자체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도전받게 된 것이다.

나. 사회·경제적 동인

미래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동인으로는 크게 ▲지구화의 급격한 진전 ▲저출산과 인구 감소 ▲사회·경제적 양극화 ▲다양한 정체성의 등장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자.

1) 지구화의 급격한 진전

앞서 디지털화와 마찬가지로 지구화 역시 21세기 혹은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20세기 후반에 지구화의 현실적 변화와 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구화가 체감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 들어, 그리고 보다 최근에 가까운 시점이다. 지구화의 진행을 살펴보면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나 인구 이동은 이미 20세기 후반에 지속적으로 진행됐지만 20세기 말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도 개혁개방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념에 의해 두 진영으로 나뉘었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정보와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과 전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1세기에는 글로벌 사회, 글로벌 문화를 이야기할 정도로 급진전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지구화의 변화를 가져 온 여러 흐름으로부터 모두 큰 영향을 받았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냉전이라는 20세기 후반의 국제질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남북 베트남, 동서독 등 20세기 후반에 분단되었던 국가들이 모두 통일된 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냉전 시작과 함께 일어난 국토의 이념적 분단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우리의 좁았던 시야와 교류의 범위는 급격하게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냉전 종식과 정치적 권위주의의 종식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면서 이른바 ‘북방 정책’은 우리에게는 상상의 영역이기만 했던 나라 및 사회들과의 교류를 가능케 했다. 또한 권위주의로 굳게 닫혔던 물질, 인적, 정보 교류가 개방되면서 21세기 초반 우리 사회에서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빠른 글로벌 문화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문화적으로 혼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20세기 말 외환위기로 대표되는 글로벌화의 충격은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과 혼용체계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동체적·집단적 문화를 급격히 개인 위주의 경쟁적 문화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지구화의 산물이었다.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출현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으며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대규모 전파를 우려한 각국 정부의 발빠른 조치에 의해 인적 이동만이 아니라 물질 이동까지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인적·물질 이동과 교류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일종의 민족주의적 흐름 혹은 고립주의적 흐름을 낳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립주의와 민족주의, 경제적 블록화의 흐름이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보듯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호전주의적 세력의 도전이 또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분쟁을 낳을지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상품, 인구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높아진 K-문화의 위

상이 팬데믹 기간 동안 BTS를 비롯한 대중음악에서 K-pop의 인기 급증, ‘기생충’, ‘미나리’ 등의 영화나 ‘오징어 게임’ 등의 드라마에서 보여준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 급증에 힘입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위상에 대해서도 글로벌 측면에서의 관심이 높아졌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으로 이전에 비해 수많은 해외 여행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반적 변화는 음식, 패션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미 21세기 들어 경제적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인의 글로벌 여행 및 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소극적인 편이었지만 농촌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상당한 수준의 지구화를 이미 경험한 상황에서 이전과 비교하기 힘든 정도로 지구화의 경험이 전면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미래에 한국으로의 국제 이주는 더욱 큰 규모로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한국의 인종적 다양성은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인종적 다양성만이 지구화의 결과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행 경험을 쌓고 또한 반대로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현재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들의 문화적 경험의 다양성 또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인터넷의 보급과 탈냉전에 따른 문호개방으로 글로벌 문화에 대한 노출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것은 보다 간접적인 형태였다면,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른 문화의 경험과 접촉이 본격화된 것은 21세기 이후이고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지구화의 진전과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목할 문제이다. 다양성에 대한 많은 사회과학 연구 중에는 다양성의 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tolerance)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이면 그에 대한 반발로 폐쇄주의와 정체성 간의 혐오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사회에서 20세기 중반 인종 간 탈분리(desegregation)가 인종 간 접촉을 높인 결과 인종 갈등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보여준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종 간 문화 충돌이

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되었던 적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은 인구의 30%라고 하는 일종의 문턱(threshold)을 넘지 않았던 시점까지의 상황이고, 앞으로 국제적 이동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다양성의 수준이 급증하게 될 경우 우리는 21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지구화의 충격에 이어 문화적으로 또 한번의 새로운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2) 저출산과 인구 감소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최근 들어서는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앞서 지구화와 관련하여 설명한대로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면서 개인화와 경쟁의 심화가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객관적·물질적 삶의 수준은 높아진 반면 주관적·정신적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육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형제자매의 수는 적어졌으며, 해외여행과 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삶의 질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현실은 출산의 주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층,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적 유제들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21세기 들어 인구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대체출산율인 2.1 수준보다 낮아져 저출산에 진입했고, 2010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기준인 1.3 이하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8년에는 1.0 이하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전망은 매년 새롭게 경신되어 2030년대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5,000만 명 이상에서 4,6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이 비슷해질 전망이다. 이것은 생산가능 연령대의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자녀까지 있게 된다면 부양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

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젊은 생산가능 연령대 인구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저출산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급격한 인구 변동은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가장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문화적 혁신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문화적 혁신을 담당했던 주역은 대부분 청년층이거나 막 청년층을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청년기가 활발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시기라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으로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장년 이후 세대가 주도하는 문화에 의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문화적으로 불만과 반발을 느낀 청년 세대가 기존의 주도적 문화에 도전하는 문화적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문화의 주도층이 그러했으며, 전후 1960년대 반문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도 그러했다. 우리 사회에서 1970년대 청년문화의 주도층 또한 청년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문화의 영향 속에서 대중문화의 전성기를 주도한 것이나 2010년대 이후 K-문화의 글로벌 흐름을 주도하는 것 역시 청년층이다.

그런데 청년층이 줄어들게 되면 이들이 담당해야 할 문화적 혁신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 물론 문화적 혁신이 청년층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더욱이 앞서 기술적 변화에서 살펴본대로 생명 연장과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해지면 중장년 이후에서도 문화적 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열린 문제이다. 문화적 혁신의 동력 약화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노인 지배(gerontocracy), 경제적으로도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세대 간 경제적 부담과 혜택이 노인에게 유리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는 향후 노인들이 고객 및 관객의 중심이 된 미디어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청년들과의 교류와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문화적 공존과 상생, 나아가 혁신의 가능성이 선순환적으로 이어지는 데 세대 간의 갈등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여기에 앞서 지구화의 진전에서 이미 살펴본대로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인구의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인구 및 문화의 다양성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제기될 갈등과 충돌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한국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세대 간, 인종 간 충돌의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

3)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국가 간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회에서 이른바 언더 클래스(under class), 즉 기존의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의 등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불평등 및 양극화 증가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숙련편향적(skill-biased) 기술변화, 지구화로 인한 인구이동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의 가격 하락, 금융자본화에 따른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 즉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의 엄청난 격차 등이다.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는 대표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일하거나 혁신적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고급 지식인력이 가져가는 몫이 엄청나게 커지는 반면, 반대로 전문적 지식이 없이 반복적인 단순 노동을 수행하는 다수 대중들이 가져가는 몫은 계속 줄어들 뿐 아니라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의 활용 등으로 인해 계속 위협받는다라는 것이다. 그 결과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지식과 훈련에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소득의 격차는 21세기 들어 디지털화와 지구화에 의해 금융자본의 관리와 투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매우 고도화되기 시작했고, 투자의 대상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투자 성과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개인 간 격차의 심화는 서로 맞물리면서 강화되기도 한다. 노동시장에서 고소득을 빠르게 보장받은 사람들이 각종 펀드 등을 통해 투자에서도 고소득을 얻게 되고, 이들이 보유한 전문적 지식을 서로 교환, 교류하며 투자 기회도 계속 나타난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투자를 통한 추가적 소득 획득의 기회는커녕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높아진 실직의 위험 때문에 소득을 박탈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경쟁 심화와 제도적 유연성 때문에 불안정 저소득층이 직면하게 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복지국가로부터 후퇴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약해진 서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공공 투자가 확대되어 왔지만, 향후 저성장이 지속되고 재정 부담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미래 문화에 가져올 혹은 영향을 미칠 변화는 어떤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문화적 불평등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문화적 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해서 설명했다. 요컨대 문화가 사회에서 또한 엘리트 사이에서 중요해지면서 문화적 취향과 안목이 사회경제적 성공과 엘리트로의 진입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문화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공교육의 확대와 교육 투자 확대로 일반적인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부르디외의 말처럼 구별짓기(distinction)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적 투자를 할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적 접근의 기회의 격차이며, 이를 즐기고 감상할 여유와 안목의 격차 또한 상당하다.

물론 뒤에서 살펴보듯이 20세기 중반 이후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보다 확대되고 일종의 공공재처럼 여겨지는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격차(digital gap)라는 말처럼 접근 기회가 실제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양적으로 기회가 늘어나는 것과 질적으로 배타적인 기회를 독점하는 것이 양립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상의 하나인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의 불평등과 함께, 청년층의 출발점 사이에서의 불평등, 즉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격차 심화는 청년층 내에서의 높은 문화적 욕구 수준

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결핍이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내부에서의 문화적 불평등은 향후 인생에서 이러한 격차와 불평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4) 다양한 정체성의 등장

정체성(identity)이란 주변 환경 및 타인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등장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집단적 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실체이다. 개인에게 정체성은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자신의 자아의 독특성을 사회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로서 등장하지만, 사회적 정체성은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형성된다. 앞에서 우리는 지구화의 진전과 인구적 변동에 따라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또한 해외와의 교류가 빠르게 늘면서 문화적 경험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모두 정체성의 다양화와 연결된다. 하지만 지구화나 인구 변동만이 새롭고 다양한 정체성이 사회에서 등장하게 되는 기반은 아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다양한 정체성이 다양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식성이나 취향과 관련해서 채식주의, 더 나아가 비건(vegan)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성적 소수자로서 동성애,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바꾸고자 한 트랜스젠더 등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밖에 성적 정체성과 별도로 생애과정에서의 선택과 관련해 비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젊은 층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인종적 정체성과 구별해서 이슬람 등의 종교적 정체성이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주목받게도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한편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때로는 외부로부터 때로는 내부적으로 등장한 것과 관련이 깊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후 보다 가속화된 개인화의 결과, 그리고 형제자매 없이 개인으로 성장한 경험에 의해 강화된 개인주의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집단주의적 획일

성의 문화에 도전을 제기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개인주의 확대와 강화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는 집단적 동조의 압력이 약해지면서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는, 혹은 남들과 달라야겠다는 생각을 낳게 된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디지털화에 따른 플랫폼의 등장과 SNS의 약진은 고립될 수 있었던 소수자 정체성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확인하며 유대감을 쌓고 교류할 수 있는 접촉과 연결의 기회를 제공했다. 정치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강조와 참여 및 존중에 대한 자각과 요구의 증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변화가 모여 우리 사회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체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각기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들의 폭발적 증가와 목소리 내기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낳고 있으며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무엇보다도 정체성이 다양한 만큼 사회적·문화적 경험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와 취향 및 지향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용이 없다면 이들 정체성들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예만 들어보아도 카페와 식당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자녀 동반 여부, 반려동물 동반 여부, 식성, 옷차림이나 문화적 표현 등에 따라 승인과 거부 나타날 정도로 정체성의 영향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커지고 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차원의 정체성들이 서로 결합되어 충돌과 갈등의 규모가 커지기도 한다. 종교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정체성이 결합해서 충돌하는 것이 최근의 예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다양화와 정체성 주장의 강화는 결국 문화적으로 정체성 기반의 문화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문화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최근 문화적 부족주의(triabalims)이란 용어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갖는다.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부족들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열린 가능성의 문제이다. 갈등이 심해지고 혐오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차이를 존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체성 문화 공유에 기반한 연대를, 외부적으로는 다양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소통과 교류, 포용과 관용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아직은 예단일 뿐이다.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미래 문해(future literacy)에 기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노력한 결과의

성공 여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5)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는 정치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민주주의가 글로벌한 정치적 가치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신념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1세기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이다. 서구 사회에서 극우 인종주의 정당들의 득세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트럼프나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민주주의 절차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지도자들이 득세했으며, 시민들 자체도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들을 일종의 팬클럽처럼 추종하며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시민을 혐오하는 감정적 양극화가 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에서 오랫동안 정치경제적 저발전의 징후라고 이야기했던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서구 사회에서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진단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적 절차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해하는 집단적 시도가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감정적 양극화는 상당히 진행됐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포퓰리즘적 성향이나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배경과 이유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의 현실을 잘 성찰해서 서구가 걸은 경로를 피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상황이다.

왜 21세기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과 배경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정체성의 정치가 부상하면서 가진 자들의 정치, 주류만의 정치에 대한 불만과 도전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전환의 결과로 등장한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가 과거의 대중매체와 달리 오류가 많은 정보를 확산하는 경

우도 있고, 이러한 정보를 극단주의나 기회주의 정치세력이 의도적으로 유포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와 미디어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정당들은 정치적 노선이나 지지자 기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엉뚱한 노선의 정치세력과 연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치인들의 성숙한 합의도출 능력 발휘가 필요한데,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는 과열되고 정치인들은 이를 부추기면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문화의 미래에 대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문화계의 자율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문화를 집단적 갈등의 불모로 전락시키거나 사회적 분열과 균열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 성숙한 문화에서는 문화를 하나의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문화를 파괴하거나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문화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근대 사회에서 문화의 발전과 문화계의 성장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문화의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과 문화인들의 꾸준한 저항과 자율성 수호의 결과이다. 이처럼 문화 및 문화계의 자율성은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정치적 환경에서 지켜질 수 있다.

만약 민주주의가 약해지고 권위주의나 포퓰리즘이 득세할 경우 문화가 위협받는다라는 것은 20세기 중반 전체주의의 비극이 너무나 잘 보여준다. 권위주의적 개입과 억압이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라진 한국의 문화가 21세기 들어 융성하고 그 국제적 위상이 급속히 높아진 것이 이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서구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집단주의에 기반해 문화와 예술에 대해, 혹은 문화예술가와 지식인 개인에 대해 위협과 상징적 린치를 가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예술, 지식, 언론과 같은 문화 전반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것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문화인들에 대해 적극적 거부를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 문화(cancel culture)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문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성숙하고 자율적이며 균형잡힌 문화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평화에 대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제

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4. 미래 문화 변화의 양상

가. 언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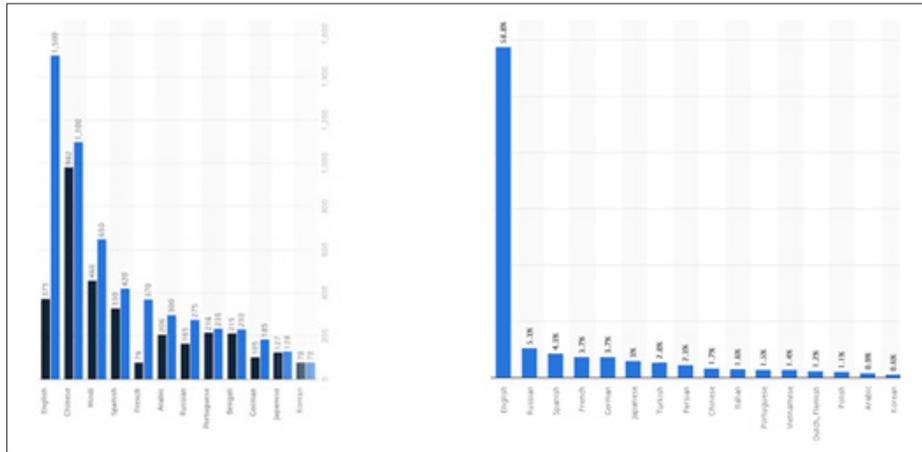
유네스코의 2001년 문화다양성 협약에서는 “언어 다양성이 문화 다양성의 기본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언어 다양성은 각 언어 종족의 권리의 존중인 동시에 언어적 표현의 풍부함을 통해 구현되는 문화적 풍성함과 혁신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물론 언어 다양성은 인종적 차원에서의 언어 종족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언어 다양성의 기본이 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종족집단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잘 지키고 보존하며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지구상에서 언어 다양성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식민주의의 영향으로 위협을 받았다.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식민주의가 지구상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언어 다양성에 대한 식민주의의 위협은 사라지는 듯 했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새로운 위협, 즉 지구화의 위협이 등장했다. 식민주의가 강제력을 동원해 언어 다양성을 위협했다면, 지구화는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통해 언어 다양성을 위협했다. 지구상에서 주류로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때 경제적 기회가 생기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오랫동안 전승해 온 언어가 아닌 국제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인구변동, 즉 소수 종족의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자 감소 및 지구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 이동 역시 언어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모국을 떠나 외국에 정착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자녀들에게는 정착지의 언어를 모국어로서 배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언어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거시환경적 요인은 인터넷

의 전 지구적 보급이다. 외국인과 직접 접촉해서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 문서나 책을 읽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주로 외국어로 된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플랫폼 미디어의 발전은 외국어로 된 드라마나 동영상을 접하고 시청할 기회도 높인다. 그런데 인터넷과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언어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대규모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보니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언어 다양성은 지구화와 디지털화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위협받는 측면이 강해졌다.

아래 그림에서 왼편은 최근 전 세계 언어에서 모국어(검정색 막대) 및 사용자(파란색 막대)의 분포이며, 오른편은 온라인 웹페이지의 언어 분포이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언어 사용자 분포와 온라인의 언어 분포 모두 치우쳐(skewed)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이 사용되는 언어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3억 7천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의 모국어인 영어를 15억 명이 사용하고, 중국어 사용자 수는 11억에 가깝다. 이는 80억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9%와 14%다. 8천만 명이 채 못되는 프랑스어의 사용자 수는 3억 7천만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언어의 쏠림 현상은 인터넷에서는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58.8%가 영어이다. 사용자 수로는 2위인 중국어의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온라인 분포 2위인 러시아어의 비중도 5.3%에 불과하다. 한국어는 이 분포에서 사용자 수와 모국어 수가 7천 8백만 명이고 온라인 언어 비중은 0.6%이다.



한국어 사용자 수는 최근 한국 인구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인다. 서구 대학에서 외국어 강좌 수강생 증가율이 한국어가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들 중에서 모국어 순위로 23위이고, 온라인 언어 비중에서는 16위이다. 향후 이중 및 다중언어의 추세와 인구 변화,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변화는 글로벌 언어의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어의 지위와 위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모국어로서의 지위는 인구 감소로 인해 낮아지되, 한국의 문화적 인기와 위세에 따라 사용자 수 및 인터넷 언어 비중에서의 순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나. 문화적 가치의 변화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문화는 특히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이다. 문화와 예술에서 고급과 저급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가치들이 문화적 산물이나 행위에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서 어떤 가치를 강조하는가는 미래 문화의 변화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화적 가치는 크게 문화 생산자가 강조하거나 문화 생산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치, 그리고 문화 소비자 혹은 수용자가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화 생산자가 강조하거나 이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치로는 크게 창의성과 진정성,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를 들 수 있다.

창의성(creativity)은 전근대 사회에서 전통 유지와 계승, 혹은 신의 은총을 표현하는 것만이 중시되던 상황에서 근대 사회로 오면서 문화 생산자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 중시되는 것으로 바뀐 이후 줄곧 강조되어 온 가치이다. 하지만 앞서 기술적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본 것처럼 GPT형 인공지능이 문화 생산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과연 창의성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고 지켜볼 필요가 커진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진정성(authenticity)은 창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더욱 강조되는 문화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문화적으로 다양성보다는 단일 기준에 따라 미의 가치가 평가되던 시기에는 아름답게 꾸미거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의 지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요즘에는 개인적인 진솔한 경험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관객이나 관람객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꾸민 것보다 덜 꾸민 진정성 있는 표현이 점점 더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인지도(popularity)는 과거 고급 취향의 순수예술에서는 경원시되었던 반면, 저급 취향의 대중예술에서는 매우 강조되었던 양면성을 갖는 가치이다. 그런데 과거 개인이나 국가의 후원에 주로 의존하던 순수예술 분야가 점점 더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클래식 음악가나 화가, 작가 모두 대중적 인지도를 중시하게 되었고, 특히 플랫폼 미디어의 역할이 커지면서 문화예술인들은 작품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되기도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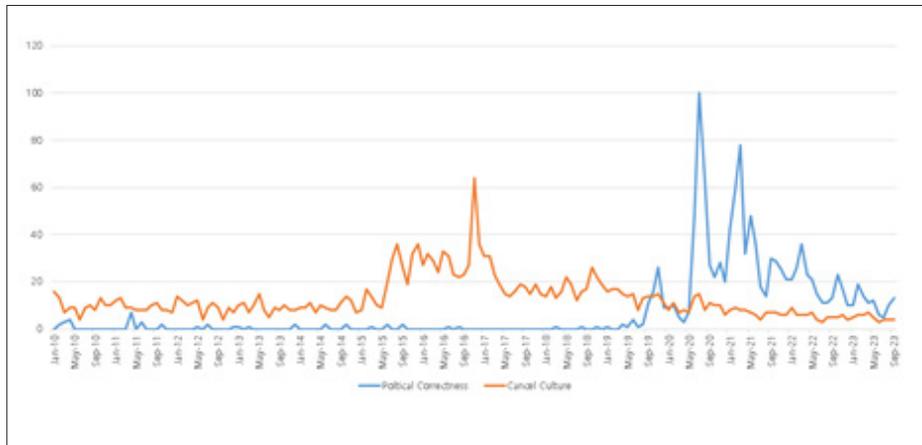
문화 수용자나 소비자 측면에서 강조되는 가치로는 다양성, 탈위계성,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의 가치가 있다.

다양성(diversity)이란 앞서 언급한 대로 인구 및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강조되면서 나타난 가치이다. 특정한 문화적 형식이나 스타일만을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것보다는 폭넓고 다양한 스타일과 형식의 문화와 예술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것이 문화 수용자나 소비자 사이에서 일종의 미덕처럼 자리잡게 된 것이다. 다양성은 특정

개인의 문화적 취향에 대해서도 가치로서 강조되지만 사회 차원에서의 문화 현상이나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가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문화적 탈위계성(omnivore)은 어떤 문화가 더 수준 높고 고급인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문화가 더 수준이 낮은지를 따지는 위계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어떤 문화가 더 가치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자신이 선호하는 문화적 취향 때문에 개인이 열등감 혹은 우월감을 갖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문화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가치 상대주의가 강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문화 생산자에 대해서도 요구되지만 문화 수용자와 소비자에게도 강조되는 가치이다. 이 가치는 문화의 형식적·내용적 완결성 외에 문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주류 혹은 특정 집단의 성향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있어 특정한 문화의 수용이나 소비는 단지 그 자체로서 만족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하게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아래 그래프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전 세계 수준에서의 관심 정도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정치적 올바름은 2010년대 중반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그것의 적극적 표현 형태인 거부(cancel) 문화의 경우는 팬데믹 초기인 2020-21년 사이에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미래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적 가치 중 생산자 측면에서 대중적 인지도, 소비자 측면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각각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한편에서는 시장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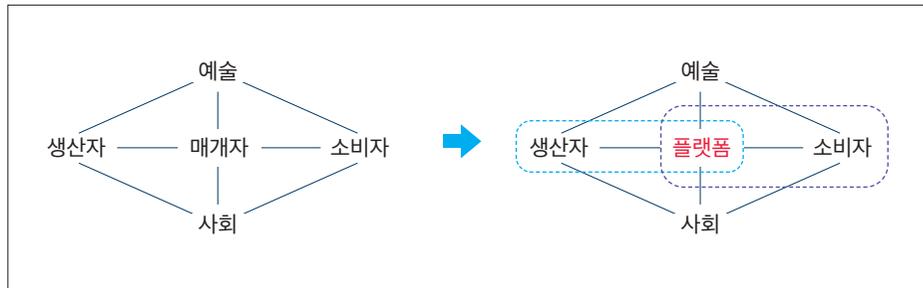
다. 문화산업의 변화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산업을 일반적인 개념 정의에 따라 ‘문화 상품, 서비스를 생산, 배포하는 산업’으로 문화다양성 선언 문서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이 ‘다양성, 생산자의 권리,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라는 특수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본다. 문화산업은 20세기 초반 서구에서 등장했으며, 발터 벤야민이 ‘기계적 복제시대의 예술’이라는 논문에서, 또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문화 산업’이라는 글에서 문화적 가치의 하락과 대중화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문화산업은 대중사회에서 대중들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대중들의 문화적 자기 표현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산업은 한편에서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어 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한 것을,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가 보다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며 소수가 아닌 다수의 문화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문화산업은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지구화의 급진전으로 급격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산업은 단지 기계적 복제가 아닌 디지털 복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계 복제가 원본의 의미와 신성함을 잃은 대신에 수많은 복제품 배포를 가능케 했다면, 디지털 복제는 복제에 따른 재현 가능성을 크게 높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유연하게 전자적으로 배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악은 기계적 복제 이전에는 공연을 통해 생산자와 같은 공간에서만 들을 수 있었고, 기계적 복제 이후에는 음반이나 라디오를 통해 공간은 자유롭지만 제한된 방식으로 제한된 품목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복제 이후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공간적 제한 없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로운 선택지 중에서 골라 개인화된 디바이스로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문화 생산자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마련된 새로운 문화산업의 기술적 토대는 생산 및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문화적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 하락 및 생산자 간 불평등과 격차 심화, 즉 양극화라는 부정적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지닌다. 나아가 문화 산업에 GPT형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인간과 함께 작업하거나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생산 및 시장 접근 기회의 확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음악 생산에서 디지털 악기들과 믹싱 기술의 결합은 많은 연주자들이 필요한 음악 녹음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웹툰 제작과 같은 분야에서도 기존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했던 중간단계가 기계에 의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생산 과정뿐 아니라 매개 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제작된 음반을 방송국 프로듀서나 디제이의 선별 과정을 거쳐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알려지고 인기를 얻게 되었던 기존의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 음악 파일을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올리면 이용자들의 입소문에 따라 인기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음악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저작권료가 수많은 이용자들의 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얻게 되더라도

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슈퍼스타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그에 따라 음악가들은 저작권 수입보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된 명성을 기반으로 공연을 통해 수입을 얻으려 하게 되었다. 작가 역시 자신의 작품으로부터 얻는 수입보다는 행사나 강연 등을 통해 얻는 수입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이외의 활동에 따른 수입 분배 역시도 슈퍼스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예술가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안정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계속 위협받게 된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산업의 재편 속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무엇보다 K-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와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수입 규모가 증가해왔다는 점과 함께, 생산자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최근 들어 높아진 결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 줄어들지 않아서 문화생산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강화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상업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 문화적 생산/소비의 경계 변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년 자신의 저서인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프로슈머(prosume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 단어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단어로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기존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 과정이 미래에는 소비자의 투입(input)이 광범위하게 생산자들에게 피드백되어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엄격한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며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가리킨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제조업에서는 소비자의 반응을 빠르게 반영해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유연생산 방식이 도입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도 베타 버전을 사전 출시해서 소비자 반응과 피드백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개발 과정에서 오류의 여지나 소비자 불만을 줄이는 이른바 민첩(agile) 작업방식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러나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연결이 늘어난 예를 살펴보기 전에,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의 지위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자. 전근대 사회의 문화와 예술은 평민 중심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민속예술과 귀족이나 특권층이 소비하는 본격예술이 있었다. 이때 본격예술의 생산자는 평민보다 조금 높은 지위를 누리지만 후원자인 귀족이나 사제, 왕족에 종속된 지위였고, 문화 생산을 주도한 것도 이들 후원자의 취미규범이었다. 그런데 근대 사회로 바뀌면서 후원자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적 주장을 펼친 자유예술가들 중심의 문화 예술 생산이 중요해지면서 순수 예술이라는 분야가 정립되고, 자유롭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로서 예술가라는 범주가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고 소비(후원)에서 생산으로 주도권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다시 모호해지고 연결된다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자기 표현과 주장이 중심이 된 문화 생산보다 소비자들과의 상호 작용 하에 이들의 관심을 수용한 문화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팬덤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팬덤에는 대중음악의 아이돌 팬들만이 아니라 인기 드라마 시리즈를 열성적으로 보는 팬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단지 문화 생산자를 응원하고 그 생산물을 열심히 감상하고 소비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생산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화적 생산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과거 게이 트키퍼로서 문학 편집자나 대중음악의 프로듀서, 디제이 등이 하던 대리(surrogate) 소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다. 요컨대 일반 대중에게 문화 생산물이 전달되기 전에 이들이 먼저 감상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의 경우로는 대중문화가 아닌 일반 문화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문화적 생산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생활예술을 들 수 있다. 생활예술이란 비교적 최근 용어이지만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과거 아마추어 문화예술과 유사한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마추어의 경우 전문 문화예술가를 흉내내거나 질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생활예술은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문화예술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문화예술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예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예술이 일상화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예술은 앞서 문화에 대한 좁은 의미의 정의와 넓은 의미의 정의가 결합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생활예술이 하나의 문화예술 형태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삶의 측면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대해 문화적 표현 및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삶의 현장을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만 생각할 경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예술로서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은 일과 삶의 구분만이 아니라 일과 삶의 소통과 연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로는 예술의 측면에서 예술의 범위와 경계가 확장되어 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제도화된 예술의 경계 바깥에 있다가 예술로서 인정 받게 된 것을 아웃사이드 예술(outsider art)이라고 부른다. 아웃사이드 예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예술 치료를 목적으로 했던 정신질환자의 그림, 뉴욕 이민자들의 예술로 시작했던 탱고와 같은 민속예술, 그리고 재난이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고백적 문학 등이 있다. 이러한 이중의 의미를 갖는 생활예술의 등장과 성장은 시장 중심의 산업화된 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 중심의 생활 중심 문화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마. 문화적 부족주의의 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와 취미규범에서 취향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위계를 허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이

등장하고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활발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화의 수평적 다원주의의 확대를 가져온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다원적인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취향 공동체(community of taste)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취향 공동체는 20세기 중반과 후반 일부에 이르기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고급취향과 대중취향이라는 위계적 구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수평적인 취향을 공유하는 자유롭고 느슨한 집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취향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이다. 20세기 대중매체가 지배적이던 시기에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와 이를 저속하다고 여겨 거부하는 고급문화의 위계적 양분이 특징이었다면, 21세기 플랫폼 기반의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위계적인 구분이 약해질 뿐 아니라 다양한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평균적 취향이 아닌 각자의 취향에 따라 연결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기반의 취향 공동체는 다른 취향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을 더 강조한다. 그 결과 취향 공동체는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취향 공동체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먼저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취향 공동체는 과거 위압적이고 배제적인 위계적 취향의 강요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취향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해방적이다. 공동체 중심의 억압적 문화 대신 그야말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가 갖추어진 셈이다. 물론 이러한 취향 공동체 내부에서도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는가와 같은 경쟁적 요소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취향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경쟁을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다. 반면 공동체주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취향 공동체의 사회적 교류를 거부하고 자신의 세계 혹은 소수의 좁은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자폐적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적 취향에 대한 존중을 공동체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용인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때 공동체주의적 측면이 강했던 한국에서도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간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취향 공동체 혹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

아들여지는 분위기이지만, 과도한 개성의 요구가 때로는 다른 개성이나 취향에 대한 존중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병리적 측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취향 공동체나 개성의 존중은 다른 취향에 대한 적극적 권리 주장이라기보다는 소극적 존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취향에 대한 존중의 주장이 과도해지면 정치적 올바름처럼 다른 취향에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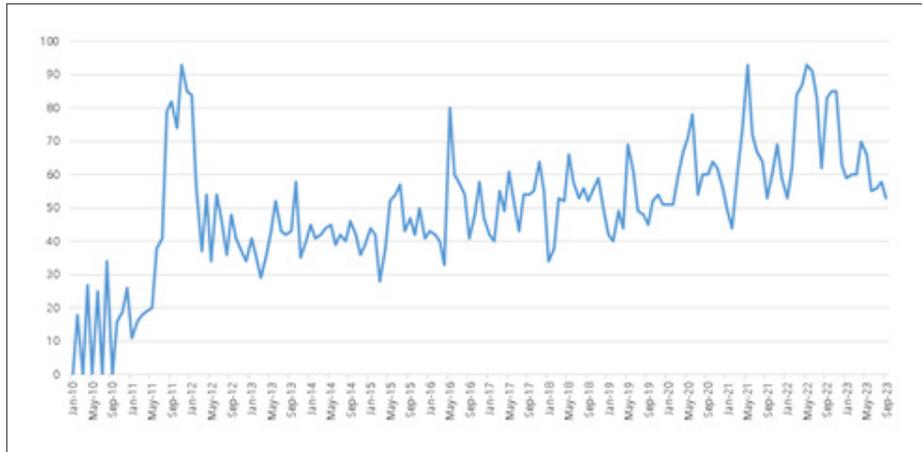
바. 양극화와 혐오 증가 우려

양극화는 21세기 사회, 정치, 경제의 현실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편을 갈라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며 공격하는 것에 더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발전을 경험한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어느 사회든 양극화에 따른 분열과 대립,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면 사회는 불안해지고 개인은 피해해진다.

양극화를 야기하는 배경으로 많은 변화들이 언급된다. 앞서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언급했듯 민주주의의 위기에 따라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면서 양보와 협력과 합의보다는 분리와 거부, 대결을 일삼는 정치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강화로 개인 간 무한경쟁이 강조되면서 자신과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고 분노와 좌절을 쏟아내는 경향도 늘고 있다. 개인화와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다양한 정체성이 부상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 양극화를 자극하고 부추기는 사회, 경제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고립되고 좌절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을 동원하는 도구로서 플랫폼 기반의 소셜 미디어가 확대되면서 양극화는 급기야 자신과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경향을 낳았고, 공격 성향이 증가하는 기반에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짙게 깔리게 되었다. 증오가 분노의 표출이라면 혐오는 이러한 증오가 특정 대상을 만나 쏟아져 나온 것이다. 사회의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향해 혐오를 쏟아내기도 하지만, 남성과

여성처럼 사회를 양분하는 집단이 서로 상대를 향해 혐오를 퍼붓는 경우도 많다. 아래 그림은 구글 트렌드로 한국에서 ‘혐오’라는 단어를 검색한 추세를 2010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보여준다.



이 추세를 보면 인터넷에서 ‘일베’라는 극우 성향 사이트가 등장한 2011년 후반, 그리고 ‘메갈리아’라는 극단 페미니즘 사이트가 등장한 2015년 무렵 혐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외에는 최근까지 계속 관심이 증가해 왔다.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착한 혐오 표현도 있을 정도로 혐오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측면도 있다. 그런데 혐오 표현을 줄이려는 노력은 때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검열 등의 시도로 나타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문제는 서구에서처럼 아직까지 직접적인 혐오 기반 폭력으로까지 연결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충분히 언어폭력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국제적인 인구 이동에 따른 외국인 유입이 늘고, 아울러 다양한 정체성 등장하고 이들의 주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혐오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 문제로서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사.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한국의 미래는 남북한의 분단을 제외하고 생각하거나 논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문제는 워낙 가변성이 높고, 그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거나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문화의 미래를 남북 분단의 문제를 고려해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쟁점이 바로 문화적 이질화의 문제이다. 정치와 경제는 이념적 대립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을 받는 분야이자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단 직후부터 이질화가 이루어지고 지속되었다. 그런데 문화란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담은 문제이자 과거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단 이후에도 남북은 문화적으로는 동질성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남한과 북한이 모두 민족문화를 지향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질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남북한 문화적 이질화는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양식의 문제만이 아닌 공식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에 의해 1948년 분단 및 1953년 정전에 따른 분단의 고착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언어정책은 공산주의 정권이 성립된 이후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의 하나로, 이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질화가 심화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방언 이상으로 커져서 자연스러운 언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이한 경로를 따른 경제, 정치 체제의 발전 결과 가치체계와 문화규범에서도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 기본적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 중에서도 유난히 더 폐쇄적인 체제였다는 점 또한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1세기 들어 북한의 폐쇄성은 과거에 비해 조금 줄어든 면이 있다. 물론 글로벌하게 개방된 다른 사회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은 이전의 냉전 시기보다도 더 폐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주변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및 교류를 통해서 알려진 면면을 본다면 남북한의 이질화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넘어서야 할 장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처럼 이질화가 심화된 남한과 북한의 문화와 관련해서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

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고민이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를 (1)궁극적으로 단일 민족이었다는 ‘과거의 현실’과 ‘현재의 이상’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정전협상이 여전히 적용되는 대립적이고 다른 사회라는 ‘현재의 현실’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문화적 이질성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해법을 제시한다. 만약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1)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문화적 이질화는 남북한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반대로 남북한의 관계를 (2)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는 서로 다른 사회 간의 차이와 다양성이며 이를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적용하게 된다. 아마도 남북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러한 두 입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5. 미래 가치와 문화

이제 미래 문화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즉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미래 문화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란 무엇인지, 즉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고자 한다. 필자는 미래에 문화 자체가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로서 다양성과 창조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문화가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로서 삶의 질과 진보, 소통과 신뢰,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공생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다양성과 창조성

문화 다양성은 주지하듯이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다. 문화 다양성은 그 함의가 다양하다. 문화는 인종과 민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다거나 하는 생각에

서 벗어나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성을 용인하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문화적 창조 역량이 더욱 증진된다는 뜻도 있다.

유네스코의 2011년 「문화다양성 선언」에 따르면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풍성해진다”고 한다. 이때 문화적 전통이란 다양한 집단들이 각자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 문화 다양성과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각자의 문화적 전통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이 보존, 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통은 그대로 유지, 전승되기만 할 대상은 아니다. 문화적 전통이 새로운 문화적 창조로 이어질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은 단지 ‘현재 속의 과거’가 아닌 ‘현재 관점에서 재해석된 과거’이며, 다른 문화는 모방의 대상이 아닌 ‘전통과 상호작용하며 창조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은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K-문화를 들 수 있다고 본다.

20세기 초중반 식민주의에 의해 말살 위기까지 처했고, 해방 이후 서구 문화의 지배적 규정력 때문에 평가절하되었던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난 시기는 20세기 후반이었다. 196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민족문화의 재발굴과 발견이 강조되었다면, 1970년대에는 일반 대중이 우리의 것, 한국적인 것에 눈을 뜨는 계기가 있었고, 1980년대 사회운동에서는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와 함께 한국적인 것은 또 다시 잊혀질 위기에 처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의 주체적 결합의 시도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자리잡은 것이 일종의 하이브리드로서의 K-문화이며 향후 이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삶의 질과 진보

20세기 후반부터 삶의 질은 국제기구에서 진보의 방향이자 그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

로 강조되어 왔다. 20세기 전반 대공황 이후 GDP가 물질적 삶의 수준을 대표해 왔다면, 이제는 물질적인 것 이외의 정신적·사회적·문화적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진보의 척도로서 삶의 질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의 신사회운동은 전후 서구 사회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 집단의 불만족이 표출되는 것에 주목해 환경, 평등, 우애 등의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다양한 삶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 삶의 질이다. 신사회운동이 표방한 다양한 가치를 정치학자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탈물질주의’라고 요약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문화는 이러한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에 기여하는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은 이와 관련해 “문화다양성이 모든 이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며 (...) 지적, 감성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더라도 정신적·문화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삶의 질은 높지 못하는데, 이러한 문화적으로 충만한 삶은 문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선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를 통해 다양한 선택의 범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는 문화를 외적 과시가 아닌 내적 충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때 문화가 제공하는 삶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범위를 누리며 질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21세기 들어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물질적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물질적 삶에서의 높은 성취에 비해 정신적·사회적·문화적 삶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수준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물질적 삶 수준은 1인당 GDP 기준 전 세계 30위권에 해당되는 반면,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측정한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한국은 60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은 물질 조건에 비해 주관적, 내면적 측면이 취약하며, 주관적 웰빙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삶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비물질적 지표들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한 OECD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지표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 문화의 다양성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선택을 누리게 하려면 문화에 대한 접근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21세기

이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문화를 경쟁력 측면에서 주로 보려 하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서도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소통과 신뢰, 통합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이 향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해야 할 가치라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통과 신뢰, 통합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정체성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강조되어 사회가 개인화되고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진다면 그 사회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사회적 소통과 신뢰, 통합의 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문화의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의 존중’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과거에 문화는 사회 내의 소통과 통합에 장애물이 되었던 적이 있다. 예컨대 신분 계급의 위계에 따라 계층별로 문화가 서로 다르고 이들 문화 간에 단절이 존재한다면, 문화는 서로 다른 신분·계급·인종 등의 집단 내의 결속만을 가능케 할 뿐 신분·계급·인종 간의 대화나 소통, 나아가 통합에는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에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위계적, 단절적인 면들이 약해지고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해서 문화를 탈위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보려는 관점이 중요해졌다. 글로벌화와 함께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문화를 신분이나 계급적 위계, 민족적 지배관계 등을 중심으로 보려는 관점보다 다양성을 중시하며 소통과 통합을 중심으로 문화를 보려는 관점이 특히 21세기 들어 강해지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의 등장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한국에서 소통과 신뢰, 통합을 위한 문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체성의 등장이 또 다른 사회적 흐름인 양극화와 결합될 경우 문화는 소통과 신뢰,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들 중에서 남북한의 이질화, 양극화에 따른 혐오의 증가,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한 거부 문화(cancel culture)의 확산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소통의 단절과 집단 간, 개인 간 불신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가 분열되고 통합이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정체성과 문화들 간의 대화와 소통, 서로를 이해하려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높여려는 시도와 노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향후 우리 사회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이주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러한 노력은 먼 훗날이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가깝고 매우 구체적인 미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지속가능성과 공생

미래를 지속적인 진보를 통한 장밋빛으로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현재의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이다. 더 나아가 기후 및 환경과 관련한 미래의 논의는 매우 우울할 뿐 아니라 위기의식으로 가득한 것들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용어도 이런 위기의식으로 가득 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UN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식에 기반해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종식,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 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망라한 17 가지의 주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포함된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문화가 “5가지 핵심 요소인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각각에 걸쳐 횡단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UN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30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문화적 지표로 삼아서 공동 실천과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2030 문화지표에는 환경과 회복력, 번영과 생활,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의 네

가지 차원에 걸쳐 문화의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개인적 삶의 질과 사회 소통 및 통합 관련 의제들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 의제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얽혀 있으며, 문화가 이러한 의제들을 실현 혹은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많은 사회과학자들과 유네스코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인류문명의 미래 발전과 관련된 쟁점 혹은 의제에 대응하는 데 문화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사회의 한 분야 혹은 영역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류 차원의 집단적 노력의 유기적 일부로 보는 관점의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V. 커뮤니케이션

박남기

1. 들어가는 말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어떠한 미래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겠다. 예를 들어 중세를 마감하고 종교개혁과 함께 르네상스를 맞이한 데는 인쇄기술의 발명이 큰 역할을 했으며, 16세기 이후 발달한 근대적 신문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19세기 말 전신, 전화의 발명과 20세기 초 라디오, 텔레비전의 발명에서 보듯 대중매체는 대중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것이다. 1990년대 초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변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후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의 사용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우리가 영위하는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사용의 역사적 진화가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최근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사용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의 미래 문해(Futures literacy)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시각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술결정론과 사회형성론의 이론적 시각이다.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은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술 자체에 내재하는 내적 논리에 의해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서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Bijker, 1995). 기술결정론은 기술편향적 시각에 경도되어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며, 인간과 사회의 능동성과 과정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형성론(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은 기술과 인간, 사회와의 관계에서 인간과 사회가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진화 경로를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의 주체는 결국 인간과 사회라는 관점이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시각 중에서 기술결정론은 인간이나 사회보다 기술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항상 비판받아 왔지만, 최근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저 기술편향적이라는 비판으로만 간주하기에는 이 이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1960년대 마셜 맥클루한(Marshall McLuhan)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로 미디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McLuhan, 1994),²⁶ 최근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전개 상황은 상당 부분 기술이 우리 생활과 미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이 활발해질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살펴보면 이들이 인간과 사회를 어떤 미래로 이끌고 갈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기술결정론과 사회형성론 중 어느 시각이 더 적절한지, 또는 더 설명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시각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26 이는 마셜 맥클루한이 기술결정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져올 미래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이론적 틀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정보 격차나 지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계시민의 역량을 길러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는 유네스코의 비전을 고려할 때, 과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불평등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유네스코가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일찍이 1970년대 초부터 지식격차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 Tichenor, Donahue, & Olien, 1970)이라는 이론적 가설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보급에 따른 지식 또는 정보 격차의 확대를 논의했다. 지식격차가설은 지식과 정보 또한 재화와 유사하게 제한된 자원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초기 정보 부자(the information rich)와 정보 빈자(the information poor) 사이의 간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지식격차가설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말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과 논의가 심화되면서다. 당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불할 수 없는 사람 간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정책적 해결책 등이 논의되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은 완화되거나 축소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고가의 디바이스와 앱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한다.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이론적 시각은 ‘미래 미디어 패러독스(paradox)’다. 이는 ‘인터넷 패러독스’에 비유한 용어로, 인터넷 패러독스란 인터넷은 초창기에 미래 미디어로서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가져다 주었으나, 오히려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은 외로움과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효과

를 드러냈다는 역설을 말한다(Kraut, Patterson, Lundmark, Kiesler, Mukophadhyay, & Scherlis, 1998). 물론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고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대인간(interpersonal) 소통에 활용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통의 풍부함과 편리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초기에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기대와 예상대로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역설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오프라인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 중독, 소외의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향후 사용이 확대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미디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인간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들어 주고 인간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거나 그 일을 대신 수행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이 가져올 비인간화, 인간 간 소통의 단절, 기계의 의한 인간 생활의 통제와 지배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인간(virtual human),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보급은 정보원과 정보에 대한 신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 예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미디어의 발전이 과연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에 대한 간략한 현황,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미래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전통적 미디어

가.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20세기 초 사회는 산업화와 대중 민주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고, 당시 기술의 발전은 매스미디어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즉, 새로 등장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고, 도시의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하루의 지친 몸을 달래주는 오락의 수단이 되었다. 매스미디어는 당시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여론과 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사회 변화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McQuail, 2008).

이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슈람과 애트우드(Schramm & Atwood, 1981)는 100만 년간의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미디어 기술이 발명된 시기를 환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문자가 쓰인 시각은 21시 33분, 인쇄매체의 발전을 견인한 금속활자가 발명된 시각은 23시 59분 14초, 라디오의 발명은 23시 59분 53초, 텔레비전은 23시 59분 56초였다(최양수·김병선, 2008). 문자시대에서 인쇄매체 시대까지는 2시간 26분 14초가 걸렸지만, 인쇄매체에서 방송매체로 전환되는 데는 39초, 비디오와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 등의 개발에는 불과 34초밖에 걸리지 않았다(최양수·김병선, 2008). 현재 우리 사회에서 텔레비전이 발명되기 이전의 세대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공존하는 것만 보더라도 미디어 기술의 발전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오택섭·강현두·최정호·안재현, 2009).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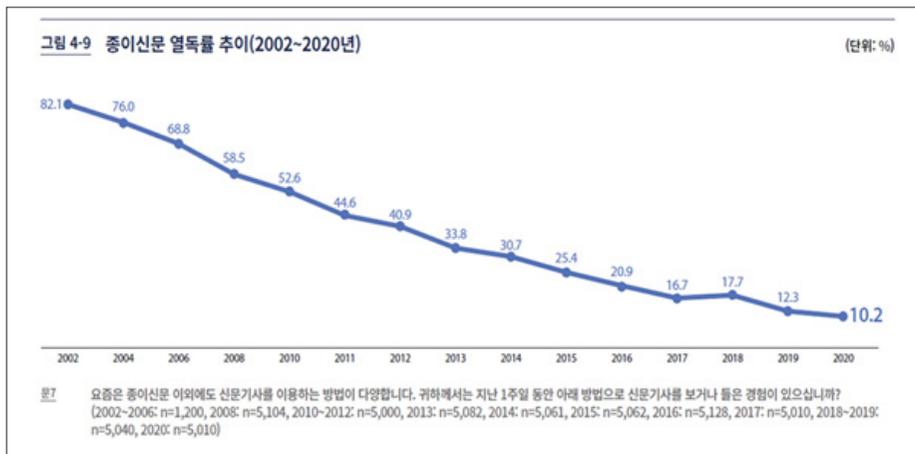
매스미디어는 그동안 정치 영역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제공, 토론 공간으로서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대중적 문화 표현의 중심 채널로서 사회 구성원에게 현실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매스미디어 수용자들은 미디어가 제시하는 정형화된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며 주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참여해 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스미디어는 대규모의 미디어 그룹을 형성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스포츠와 여가산업 등에게

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McQuail, 2008). 아래에서는 개별 미디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문

1660년 독일의 <라이프찌거짜이퉁(Leipziger Zeitung)>이 최초의 일간지로 발간된 이후 신문은 20세기 말까지 대표적인 매스미디어로 자리를 지켜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신문을 대체할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점차 그 역할이나 수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87.8%에 달했던 종이신문 구독률은 2017년 16.7%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6.3%까지 떨어졌다(이정환, 202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아래의 <그림 1>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이신문 열독률을 보여준다.

그림 5-1. 종이신문 열독률 추이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0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신문은 20세기 초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속보성을 잃고 심층분석과 탐사보도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뉴미디어의 위

협,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 포털의 영향력 확대, 인터넷과 무료 신문의 등장 등으로 인해 신문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의 하락을 가져왔고, 독자 수의 감소는 신문사의 사회적 위상마저 떨어지게 만들었다(김진웅·심영섭, 2007).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신문기업들은 종이 신문의 기사 생산에 집중하기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종의 지식정보 종합기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우형진, 2009). 그 대표적인 예가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라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전통적인 엘리트 신문이라는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에서도 선두에 나서고 있는데, 2020년 말 현재 뉴욕타임즈의 유료 구독자(종이신문과 디지털 합계)는 752만 3천여 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유료 구독자 가운데 디지털 구독자가 669만 명으로 89%에 달하며, 이에 따라 예전에 비해 웹디자이너와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등 디지털 기술 인력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강미혜, 2023). 뉴욕타임즈가 성공한 것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높은 평판 등이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했던 건 결국 신문 본연의 사명인 고급 저널리즘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송의달, 2021). 결국 고급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초가 탄탄해야만 디지털로의 유료 전환도 순조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신문 산업 또는 저널리즘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포털 뉴스의 강력한 영향력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문 독자는 종이 형태의 신문이나 신문사의 자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보기보다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접하고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비율이 72%로 조사 대상 46개국 중에 가장 높았으며, 언론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중은 5%에 그쳤다(오세욱·박아란·최진호, 2021). 이러한 뉴스 소비 패턴에 따라 포털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의 개인화와 맞춤형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유도하기보다는 독자가 선호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내용의 의견만을 지속적으로 반복 전달하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뉴스 소비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언론사는 포털에 뉴스를 판매하는 단순한 콘텐츠

츠 제공자로 전락하기도 했다(진민정, 2021). 물론 포털 뉴스가 독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중소 신문사들이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뉴스와 정보 검색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요구와 취향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수용자 만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효과도 제기되고 있다. 포털 뉴스의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편향된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뉴스와 정보 소비를 통한 여론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뉴스의 내용 자체도 연성화되거나 낮은 신뢰도 혹은 전문성에 머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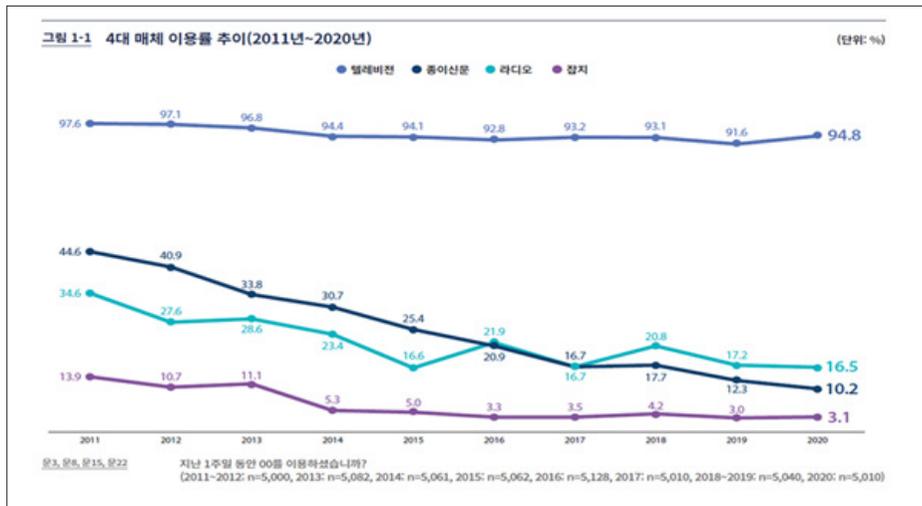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은 최근 신문의 매스미디어로서의 역할, 산업적 측면에서의 쇠퇴 등 부정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문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즉, 온라인을 통한 뉴스 소비의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전통적 신문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 신문은 최소한 일정한 기간의 직업적 훈련을 받은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편향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며(한국언론재단, 2021), 최근에는 신문 1면을 읽어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는 유행도 나타나고 있다(구아모, 2023). 결국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고 신문의 소비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뉴욕타임즈와 같은 전통적 엘리트 신문의 저널리즘 전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심층보도, 탐사보도, 객관주의 보도 원칙 등은 시대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민주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요소로 기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방송과 케이블

지난 수십여 년간 매스미디어의 중심은 방송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0년대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방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 사회화, 오락 제공 등 매스미디어의 주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등장하고 미디

어 플랫폼이 다양해졌지만 텔레비전은 여전히 많은 가정의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매체라 할 수 있다. 즉, 지난 수십 년 동안 텔레비전은 미디어 소비의 핵심적 매체로서 시청자들의 주요 여가시간 이용 수단이자 문화 공동체 형성의 디딤돌이 되어 왔다. 아래의 <그림 2>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 등 4대 전통 매스미디어의 이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5-2. 4대 전통 매스미디어 이용률 추이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0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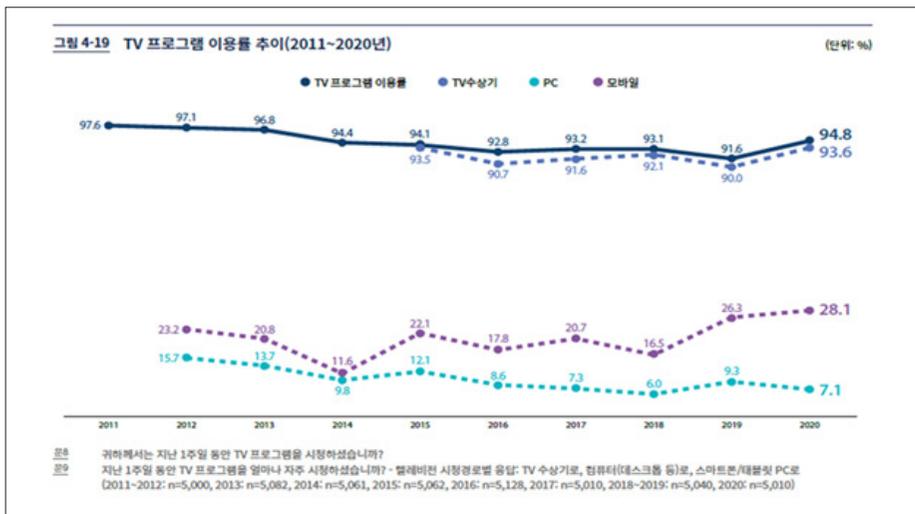
지상파 방송이 중심이던 텔레비전은 케이블 채널이 등장하면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전파의 유한성으로 인해 4-5개 채널로 제한되었던 지상파 방송과 달리 수백 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점차 확대되면서 시청자들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박원기·김병희, 2018).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IPTV 가입자 수는 1,989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2019년 1,713만 명 ⇨ 2020년 1,854만 명 ⇨ 2021년 1,989만 명)를 보이고 있으며, 넷플릭스, 웨이브(Wavve), 티빙(Tving) 등 OTT 사업자들의 매출, 이용률, 유료 이용자 비율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하

면서 유료 방송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22).

한편, 오랫동안 무료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지상파 방송 시대를 지나 유료 방송이 다양해지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은 더욱 많아졌지만,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더 떨어지기도 했다. OTT 등 유료 방송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방송사가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중계 또한 OTT가 독점 중계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채널에서 볼 수 있었던 스포츠 프로그램을 돈을 지불하고 시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료 방송의 증가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시청자에게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으며, 텔레비전 시청에서도 이러한 불평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방송 역시 신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 역할이나 규모가 약화되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텔레비전 시청 패턴이 바뀌고 있고, 텔레비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상물을 통한 정보와 오락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3>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플랫폼의 이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5-3.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률 추이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0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콘텐츠를 ‘숏폼’ 형식으로 재가공해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BC는 뉴스 ZIP, 자막뉴스, 쇼츠 등 지상파 방송 뉴스를 유튜브에 맞게 재가공하고 있으며, 속보형 뉴스도 라이브 기능을 활용해 송출하고 있다.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 미디어는 틈새시장을 찾아 경쟁력을 키워 왔다. 예를 들어 신문은 깊이 있는 정보와 논설 등을 통해 독자층을 유지했으며, 라디오는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주로 지역방송, 날씨, 교통, 음악 등 특화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웠다. 영화의 경우에도 텔레비전 등장 이후 위기를 맞았으나, 대형 화면과 특수 효과를 살린 작품의 제작 등을 통해 사람들이 꾸준히 영화관을 찾도록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과 배급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워 왔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축적된 콘텐츠와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또는 소셜미디어와의 서비스 공유,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과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 제공 등에 관심과 투자를 기울인다면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3.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이용

라디오가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는 38년이 걸렸고, 텔레비전은 14년, 인터넷은 4년이 걸린 반면, 가장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의 하나인 페이스북(Facebook)은 불과 1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의 확산 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자신의 일상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기능, 사용자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자기표현을 가

능케 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다. 즉, 소셜미디어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정서적, 심리적 욕구를 표현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시켰다(Rau, Gao, & Ding, 2008).

소통에 있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앞서 살펴본 매스미디어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즉 일대다의 커뮤니케이션(one-to-many communicat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과 달리, 일대일(one-to-one) 또는 다대다 커뮤니케이션(many-to-many communic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메시지 송신자와 수신자의 경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통이 더는 일방향적이 아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신문에서는 댓글을 통해 독자가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유튜브 사용자들은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댓글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동영상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등, 소셜미디어는 전통적 매스미디어가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소통의 활성화로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사업자나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예전의 매스미디어와 달리 새로 제공하는 기능들은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한다. 그동안 많은 미디어 효과 연구들은 미디어의 강효과를 주장해 왔다. 20세기 초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소개된 ‘탄환이론’과 ‘피하주사이론’ 등은 모두 미디어의 강효과 이론을 설명한 것이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소개된 수정된 강효과 이론(의제설정이론, 문화계발효과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 등)은 모두 미디어의 강력한 효과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몇몇 메시지 송신자나 콘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여론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될 수 있다. 인플루언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역할과 영향력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 2단계 유통 이론

(Two-step flow theory)을 연상케 한다. 즉, 미디어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수용자의 중간에서 미디어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후 재해석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의견지도자(opinion leader)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파워 블로거(power blogger)나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킴으로써 신문과 방송 등 기존의 매스미디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디어와 수용자를 연결하는 매개로서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개별 미디어 자체의 영향력은 줄어든 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견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개인 미디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에 맞춰진 메시지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요와 공급의 과정도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 매스미디어는 개인에 맞춰진 콘텐츠보다는 대중에 맞춰진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수용자 개인에 맞춰진 차별화된 전략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 법칙을 따르는 매체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개인화에 맞춰진 콘텐츠라 할 수 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미디어 소비자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춘 기사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충성스런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일반 사용자가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동시에 참여하고 그 빈도와 양도 증대되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환경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과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능력이다(Gilster, 1997).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컴퓨터와 디지털 디바이스를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 이상을 의미하며, 이는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활용 전반에 관련된 역량이기도 하다(권성호·김성미, 2011). 더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종합

적인 틀이다(Eshhet-Alkali & Amichal-Hamburger, 2004).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강조된다(권성호·김성미, 2011). 첫째는 비판적 이해(critical understanding) 능력이다. 이는 다양한 플랫폼으로부터 전달되는 미디어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분석해서 능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근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무수한 가짜뉴스를 판별해내고 정보와 지식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결국 비판적 이해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둘째는 창의적 생산(creative production) 능력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환경은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도 지속적으로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카카오톡에서의 텍스트 생성과 링크 전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과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등도 넓은 의미에서의 콘텐츠 생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협력적 의사소통(collaborative communication) 능력이다. 전통 매스미디어와 달리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양방향 또는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미디어 사용자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수용하는 사회정서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연결성, 상호호혜성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결국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플랫폼이 된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하드웨어적인 요소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디지털화된 정보와 지식을 선택·가공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여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미래

현재 대다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은 당

분간 지속되거나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9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98%, 그리고 70대 이상의 노년층도 스마트폰 사용률이 85%에 이른다. 이 중에는 사용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독자도 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에 의하면 만 3세에서 69세 사이의 스마트폰 이용자에서 스마트폰 중독률은 23.6%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상당수가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중독률은 수치 이상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과 의존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이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스마트폰 역시 일종의 전화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전화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기를 발명한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화는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디바이스로 자리잡아 왔다. 벨이 만든 전화 회사인 AT&T는 초기에는 전화기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전화기는 가장 적절한 디바이스였다(Fischer, 2023). 여기에 스마트폰은 매스미디어의 대표 디바이스인 텔레비전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다른 시청자와 사회적 소통을 하는 소셜시청(social viewing)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합쳐진 플랫폼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도 결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의 결합이 그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의 결합

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모바일화, 스마트화, 개인화는 앞에서도 언급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있어서 개인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디바이스가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간 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4. 인공지능

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1956년에 이미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과학 및 공학’으로 정의된 오래된 개념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으며(오세욱, 2016; Wang, 2019),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을 대신해서 수행해줄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내장되어 있는 시리(Siri)와 빅스비(Bixby)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 구글 홈이나 클로바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사용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챗봇(chatbot), 그리고 최근의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챗GPT는 발표된 지 두 달여 만에 월 사용자가 1억여 명에 도달했으며,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게 보급된 기술이 되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각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 2022)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부 AI 준비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가 미국,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 캐나다 다음인 6번째로서 AI 관련 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생활에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 리터러시 또한 중요한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문해력이다. 롱과 마게르코(Long & Magerko, 2020)는 개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인공지능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인공지능 자체를 제작하거나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등의 프로그램 개발자나 엔지니어에 국한되어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칸들호퍼 등(Kandlhofer et al., 2016)은 일상 생활에서 글을 읽고 쓰는 데 필요한 리터러시가 필수 역량이듯, 미래에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적일 것이라 예견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최근 챗GPT가 이용되면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환각’(hallucination)과 같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 인공지능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의 적용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과 유튜브, 네이버 등은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나 콘텐츠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적해 사용자의 기호나 취향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결과 필터링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을 통해 여론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하게 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비슷한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각의 정보만을 얻게 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현실의 부적절한 인식 등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또 다른 분야는 가상인간(virtual human)이다. 최근 가상인간 기술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실제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 광고 분야에서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기도 하고, 종합편성 채널 MBN은 김주하 앵커와 똑같은 모습을 한 가상 앵커를 출연시키기도 했다. 가상인간 기술은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놀라운 진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주하 앵커의 가상인간이 가짜 뉴스를 전달할 경우 여론형성에서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로봇 저널리즘 역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분야 중 하나이다. 로봇 저널리즘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작성하던 신문 기사를 로봇이 대신해서 작성하는 등 신문 기사 작성과 관련된 여러 과정에서 로봇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로봇 저널리즘은 2013년 3월 미국의 LA타임즈가 캘리포니아의 지진 발생 보도를 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연합뉴스, 조선일보, SBS 등에서 로봇이 제작하는 기사를 일부 전송하기도 했지만 초기의 기대만큼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로봇 저널리즘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로봇이 작성한 기사에 오류가 있거나 편향된 기사가 전달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로봇 저널리즘 관련 일부 연구는 현재 저널리즘의 위치와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예를 들어 클러월(Clerwal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똑같은 기사를 보여주면서 한 집단에는 사람이 쓴 기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집단에는 로봇이 쓴 기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여자들이 로봇이 썼다고 하는 기사에 더 신뢰를 보였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또한 로봇이 쓴 기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사람들이 현재의 저널리즘 관행이나 기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짜뉴스 문제 등으로 인해 신문에 대한 평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커뮤니케이션과 미래 문해

이상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현재 주요 미디어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미디어는 사라지거나 다른 미디어가 새롭게 소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이 우리 사회와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주요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양식도 변화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기술결정론과 사회형성론의 논의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소통을 돕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라 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대중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일방향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발전하는 한편으로 이들이 사용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계속 유지되며, 사용자는 이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발전의 경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이를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의 욕구와 기호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진화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채택되지 못하고 사양길로 접어든 경우도 있다.

현재 소통의 도구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역시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다. 얼마 전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사용자 수가 많았던 페이스북은 점차 사용자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대신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로 자리잡고 있으며, 카카오톡의 보편적인 활용은 그 이전에 비해 사람들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많이 변화시켰다. 문자뿐만 아니라 이모티콘도 널리 쓰

이면서 이제는 감정의 전달까지도 말이나 얼굴표정이 아니라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과의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도 하나의 객체로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을 통한 인간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겠지만,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계에 매몰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에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나. 여론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항상 사회 변동의 중심에서 왔다.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주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미디어는 여론 형성, 국가와 정부에 대한 견제, 사회적 합의의 도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미디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정보와 뉴스의 전달로 인해 제한되거나 편향된 뉴스와 의견이 유통되고, 정치적 의견이 양극화되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야 할 미디어가 오히려 왜곡된 여론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단시일 내에 얼마나 개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널리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가능성이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뉴욕타임즈가 디지털로의 전환에서 성공적일 수 있었던 배경은 튼튼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고수하고 고품질 신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했다는 점이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당시의 엘리트 신문이었

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황색 저널리즘의 폐해를 극복했다.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나 편향된 왜곡 보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 역시 저널리즘이 본연의 자세로 책임 있는 보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보와 뉴스의 소비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미디어와 언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제4부’라고 불릴 만큼 그 역할과 영향력이 컸다. 대부분 국가의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언론 자유의 보장을 확장해 왔고,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정부와 미디어가 건전한 견제 관계를 유지할 때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뉴스나 정보,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디어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거짓된 정보와 왜곡, 편향된 보도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미디어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다.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겠다. 정보와 지식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사회 내에서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 밖에 없다.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는 늘 존재했고,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Tichenor, Donohue, & Olien, 1970).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격차는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의 9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른 사람과의 소통 또한 예전과 달리 활발해짐으로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과 공유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과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전히 엘리트층은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네이버

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상의 고급 정보를 공유하며,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엘리트 신문들은 특정 정보를 유료로만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OTT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이다. 이는 결국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발전하고 다양해진다고 하더라도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과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과 격차는 지식정보화시대가 가속화될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식과 정보의 불평등과 격차가 지속된다면 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도 더 심해질 수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하나의 재화이며,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는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앞서 언급한 미래 미디어 패러독스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기존 사회경제적 질서를 재편할 수 있지만 빈부의 격차를 없애거나 좁히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미디어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역할과 경제적 영향력을 감소시켰지만, 신형 미디어 기업의 출현과 함께 경제적 부와 주도권도 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즉, 전통적 미디어 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등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신형 미디어 기업인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뉴미디어 기술의 축적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부를 쌓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여전히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오히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형태로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와 유토피아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

라.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려되는 점 중의 하나는 강화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소개될 때마다 항상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지만, 한편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소유하는 정부나 기업이 사용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오히려 빅브라더(Big brother)의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끊임없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소통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며,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사용은 분명히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고 소통과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에의 의존은 결국 정부나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며, 프라이버시의 보호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빅데이터(Big data)의 형태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함께 그 이면에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준다.

마. 사회적 약자와 소수 문화 대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에 관한 미래 리더러시의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협력적 의사소통이다. 앞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이 불평등과 격차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기술의 발전은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언어의 발달, 금속활자의 발명과 인쇄매체의 발전, 근대적 신문의 보급,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발명,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전파 등은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포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범위와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 문화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낙오자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심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경제적 약자가 존재하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층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 속도에 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사용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단시간 내에 습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단체가 사회적 약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채널 숫자를 증가시키고 있고, 늘어난 채널은 기존 주류 문화를 전파하고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참여와 협력, 상생의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글로벌화

인터넷을 기점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 경계나 울타리가 많이 허물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의 칩만 교체하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표준의 세계화와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글로벌화라 할 수 있다. 세계 어디에 가든 구글은 다양한 정보를 지역에 맞게 맞춤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의 세계화·글로벌화는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K-pop의 인기, 그리고 한류 열풍이라 할 수 있다. K-pop의 선두주자인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으며, 이들은 음악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문화적 교류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외교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 외에도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영화와 영상물, 온라인 게임 등은 한류의 영향력과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초기에는 K-pop과 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문화적 거리감(cultural distance)이 적은 아시아 국가에 제한되어 있었으

나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는 세계 어디에서든 대한민국의 문화와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시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텐츠 보급과 홍보를 강화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 세계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장벽과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²⁷을 많이 낮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K-pop의 인기와 한류 열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화 상품이든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1980년대 홍콩 영화의 인기가 십여 년이 지난 후 점차 쇠퇴했고,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드라마의 인기도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전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K-pop과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연예기획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문화 상품의 인기는 지속적인 혁신과 강력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K-pop과 영상 콘텐츠의 인기 유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주변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침범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문화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역사, 가치, 문화적 정체성을 포함하는 상품이므로, 특히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K-pop과 영상 콘텐츠의 인기를 문화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나 미디어 제국주의(media imperialism)의 한 형태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문화적 교류와 다양성을 확대하면서 K-pop과 영상 콘텐츠는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7 문화적 할인은 한 국가의 문화 상품이 다른 국가로 전파되면서 문화적 가치가 줄어들거나 문화 상품 수입 국가 국민들이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원래 문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진전된 형태로 가능하게 했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인류 역사의 주요 분기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관된 역사적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항상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는 오랜 인류 역사를 비추어볼 때 최근 가장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이 소개되고 있으며,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상상하던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는 가상인간은 실제 인간과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으며, 가상인간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와 결합된다면²⁸ 겉으로 보이는 형상과 전달하는 메시지가 모두 사람과 비슷하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질지도 모르는 시점이다. 실제로 공학자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같은 모습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강인공지능(strong AI) 시대의 도래가 2035년이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10여 년 후에 실제로 강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질지 아닐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미래 문해력을 길러야 할 때임에는 분명하다. 미래 문해력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분석적으로 재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콘텐츠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미래 문해 능력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28 실제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해 함양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건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능동성과 적극성이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 문해는 준비가 가능하며, 미래 문해는 미래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미래’. 그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인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과 희망을 모두 줄 수 있다. 유네스코는 불안을 피하지 않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한다.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미래문해’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때, 인류 문명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 중 하나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이번 연구는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 영역인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아우르는 약 30년 정도 후의 미래를 상정하며, 현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 한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현재와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삶의 안전판’으로서 교육의 역할이 미래교육의 핵심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다. 교육의 초점이 ‘학습자의 삶’에 두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 간 협업이 관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산업의 변화와 노동 시장, 자동화 기술의 확산과 새로운 가능성, 한국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개념을 설명하며,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세계적 환경 변화에 기초해 우리의 미래 교육에 필요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3가지 혁신 방향으로 1) 모든 인간의 잠재적 역량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기초로서 리버럴 아츠 교육, 2)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한 진정성과 존중이 있는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그리고 끝으로,

3) 평가(시험) 중심 교육의 대변환을 위한 엘리트 교육의 혁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과학 분야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생명이나 인권, 정체성 등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제기하는 다양한 이슈들, 인간과 기술, 인간과 자연 간 관계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격차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사회의 과학 문해를 인공지능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과학 문해에 담긴 미래와 대중의 과학 이해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로 과학과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 의미를 고찰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주로 발전주의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담론이 오히려 과학기술을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평화 구축을 위한 과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유엔 보고서가 제시하는 주요 메가트렌드 다섯 가지 항목 1) 기후변화와 자연자본, 2) 인구구조 변화, 3) 도시화, 4) 새로운 첨단 기술, 5) 불평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실천적 해석의 차원에서 예견적 거버넌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문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셋째, 문화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동인으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인공지능, 생명 연장 등을, 사회경제적 측면의 동인으로 지구화의 심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사회·경제적 양극화, 다양한 정체성, 민주주의 위기 등을 미래 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유네스코가 말하는 문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특히, 시간성이나 역사성, 변동성이라는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와 미래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바람직한 미래를 중심으로 문화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으로 1)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적 가치는 무엇이 될 것인가? 2)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문화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이 두 측면에서 미래와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변화의 동인을 기술적 동인과 사회·경제적 동인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변화 동인들에 의해 나타날 미래 문화의 변화 양상으로 1) 언어의 변화, 2) 문화적 가치의 변화, 3) 문화 산업의 변화, 4) 문화적 생산/소비의 경계 변화, 5) 문화적 부족주의의 부상, 6) 양극화와 혐오 증가 우려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

로 미래에 문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를 다양성과 창조성, 삶의 질과 진보, 소통과 신뢰 및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공생으로 제시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커터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변화에 주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정보 및 지식의 격차와 미래 미디어 패러독스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기했다. 유네스코 미래문해의 관점에서 크게 3가지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사회와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기술결정론과 사회형성론의 이론적 시각, 2)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정보 격차나 지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3) 미래 미디어 패러독스의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어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 방송과 케이블을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후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발전이 우리 사회와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1)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 2) 여론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3)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 4)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5) 사회적 약자와 소수 문화 대변, 6)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등의 영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가 항상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일관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래 문해 능력에서 필수적인 요건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의 능동성과 적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래문해는 미래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예측한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별 주요 동인과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미래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지 초안을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실시할 설문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며, 미래 분야에서의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외 여러 분야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번역) 자료 - 단행본

- 오성근, 『미셀 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 최호근, 『역사 문해력 수업』, (푸른역사, 2023)
- 이재인, 『AI 빅뱅: 생성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동아시아, 2023)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헤이복스, 2015)
- 전성우, 『막스 베버 사회학』 (나남, 2013)
- 전치형 홍성욱, 『미래는 오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어떻게 미래를 독점하는가』 (문학과 지성사, 2019)
- 조희정, 『로컬, 새로운 미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 추창훈, 『로컬에듀: 지역교육을 위한 희망 로드맵(2017)』 (에듀니티, 2017)
- 이재인, 『AI 빅뱅: 생성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동아시아, 2023)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헤이복스, 2015)
- 전성우, 『막스 베버 사회학』 (나남, 2013)
- 전치형·홍성욱, 『미래는 오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어떻게 미래를 독점하는가』 (문학과 지성사, 2019)
- 조희정, 『로컬, 새로운 미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 추창훈, 『로컬에듀: 지역교육을 위한 희망 로드맵(2017)』 (에듀니티, 2017)
- 홍찬숙,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세창출판사, 2022)
- 오택섭·강현두·최정호·안재현,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개정 2판). 파주: (나남, 2018)
- 유창복·이재경·김다예, 『포스트코로나와 로컬뉴딜』 (책숲, 2020)
- 윤찬영·심병철, 전상인(옮김), 『로컬 꽃이 피었습니다 - 로컬 꽃을 피우는 발자취를 따라서』 (Storehouse, 2021)
- 제임스 C. 스콧, 『국가처럼 보기』 (에코리브르, 2010)
- 제임스 하킨, 정병선(옮김), 『미래시만개념사전』 (21세기북스, 2009)
- 리처드 호가트, 이규탁(옮김), 『교양의 효용』 (오월의 봄, 2016)
- 던바(R. Dunbar), 김학영(역음), 『멸종하거나, 진화하거나』 (반니, 2015[2014])
- 송의달,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혁명>. 파주: (나남, 2021)
- 랄랜드(K. N. Laland), 김준홍(역음), 『다윈의 미완성 교향곡: 문화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가』 (동아시아, 2023)
- 리버먼(M. D. Lieberman), 최호영(역음),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시공사, 2015)
- 로즈(T. Rose), 정미나(역) 『평균의 종말』 (21세기북스, 2018)
- 모종린,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로컬 콘텐츠의 힘』 (알키, 2021)
- 무어(D. Moore), 정지인(역음)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 - 환경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유전체에 관한 행동 후성유전학의 놀라운 발견』 (아몬드, 2023)
- 맥클루언(M. McLuhan), 김상호(역음),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1964])
- 베나나브(A. Benanav), 윤종은(역음),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책세상, 2022)
- 다니엘 S. 밀로, 양영란(옮김), 『미래중독자』 (추수밭, 2017)
- 부르디외(P. Bourdieu), 이상호(역음), 『재생산』 (동문선, 2000)
- 세넷(R. Sennett), 김홍식(역음), 장인: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21세기북스, 2010)
- 슈마허(E. F. Schumacher), 이상호(역),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2002)

- 시덴토프(L. Siedentop), 정명진(역), 『개인의 탄생 - 양심과 자유, 책임은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부글북스, 2016)
- 시울라(J. B. Ciulla), 안재진(역), 『일의 발견』 (다우, 2005)
- 에스포지토(R. Esposito), 윤병언(역), 『코무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 (Critica, 2022)
- 엥겔(S. Engel), 김두환(역), 『학교의 미래, 이를 수 없는 꿈?』 (한울, 2023)
- 고르(A. Gorz), 이현웅(역), 『프롤레타리아어 안녕』 (생각의 나무, 2011)
- 니스벳(R. Nisbet), 강대기(역), 『현대 사회의 정신사적 기초』 (문학과지성사, 1990)
- 윌리엄스, 성은애(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1961])
- 이글먼(D. Eagleman), 김승욱(역),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알에이치코리아, 2022)
- 이글먼(D. Eagleman), 브란트(A. Brandt), 엄성수(역), 『창조하는 뇌』 (쌤엔파크스, 2019)
- 이글턴(T. Eagleton), 『유물론: 니체,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의 신체적 유물론』 (갈마바람, 2018)
- 케인스(J. M. Keynes), 정명진(옮김), 『설득의 경제학』 (부글북스, 2009[1931])
- 크로포드(K. Crawford), 노승영(역), 『AI 지도책: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인공지능의 실체』 (소소의책, 2022)
- 푸레디(F. Furedi), 박형신(역), 『교육은 왜 교육하지 않는가: 교육 낭비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19)
- 하위징아(J. Huizinga), 이종인(역), 『호모 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연암서가, 2010)
- 누스바움(M. Nussbaum), 우성역(역),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2판 (궁리, 2016)
- 휴즈(J.A. Hughes)-샤록(W. W. Sharrock)-마틴(P. Martin), 박형신 역, 『고전사회학의 이해』 2판 (한울아카데미, 2018)
- McQuail, D. (2005).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양승찬-이강호 (공역) (2008).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파주: 나남.

국문 자료 - 학술논문

- 김두환, “인공지능자동화 전면화 국면에서 일과 사회: 창의성의 문제” 『지역사회학』 23(2) (2022)
- 김두환, “기술진보의 양면성과 미래 교육: 자유로운 사회에서 삶의 기량.” 『사회사상과 문화』 22(4) (2019) 03-138
- 김두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론 비판.” 『사회사상과 문화』 20(4) (2017) 197-236
- 김두환, “교육의 미래: 경제에서 사회” 『사회사상과 문화』 19(4) (2016) 191-222
- 김유선,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KLSI 이슈 페이퍼 2015~02.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홍중, “생존주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죽음의 문제.” 『사회사상과 문화』 20(4) (2017) 237-273
- 우형진, 신문기업의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문제점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2009) 58-81
- 권성호·김성미, 소셜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재개념화. <미디어와 교육>, 1권 1호 (2011) 65-82
- 김진웅·심영섭, 신문유통의 개선에 관한 연구-신문유통원 개원 1년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보고서 2007-06. 서울 신문발전위원회 (2007)
- 진민정, 언론 생태계 망가뜨린 ‘포털 클릭 전쟁’.<관훈저널>, 63권 3호, 45-51 (2021)
- 박원기·김병희,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에 대한 도달률과 프로그램 충성도 및 채널 레퍼토리의 비교분석. <광고PR실학연구>, 11권 1호 (2018) 64-9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현경(역),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2022)
- 오세욱, 저널리즘과 알고리즘의 융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권 3호 (2016) 51-101

국문 자료 - 보고서

- 외교부, 『2022 유네스코 개황』 (외교부, 202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개관』 <https://www.unesco.or.kr/unesco/introduction> 에서 2023.08.20. 인출.

- 오세욱·박아란·최진호, <디지털뉴스리포트 2021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 최양수·김병선, <미디어 진화에 따른 통신문화의 변화와 통신정책의 역할>.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한국언론재단, <2021 신문을 말한다>. 서울: 한국언론재단 (2021)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조사(2020)>.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Retrieved 8/22/23 from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99&mPid=74&pageIndex=&bbsSeqNo=79&nttSeqNo=3173539&searchOpt=ALL&searchTxt=>

국문 자료 - 신문기사

- 강미혜 (2023, 4, 6). [디지털 전략 점검] 해외 언론에 새로운 직책이 생겨나고 있다.
- <미디어오늘>. Retrieved 8/12/23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226>
- 구아모 (2023, 2, 13). '미니 역사책' 읽는 느낌? MZ들이 종이 신문에 빠진 이유. <조선일보>. Retrieved 8/12/23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12/03/YJ5DNRVHV5GINGQGOKUKH3M5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방송통신위원회, (2022, 12, 28). 방송산업 성장세 유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 Retrieved 8/12/23 from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4380>
- 이정환, (2023, 02, 06). 종이신문의 혁신, 맥락과 통찰을 담아야 산다. <뉴스토마토>. Retrieved 8/11/23 from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75298&inflow=N>

영문 자료

- Carbó-Catalan, E., Meylaerts, R. (2022). Translation Policies in the Longue Durée: From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 to UNESCO. *Global Literacy Studies*. 301-328
- Renoliet, J.J. (1981). L'UNESCO oubliée: La Société des Nations et la coopération intellectuelle (1919-1946). Paris: Éditions de la Sorbonne.
- Riel Miller, (2018a). "Introduction - Futures Literacy: transforming the future," R. Miller (ed.), *Transforming the Future: Anticipating in the 21st Century*, Taylor & Francis
- Riel Miller, (2018b). "Sensing and Making-sense of Futures Literacy: Towards a Future Literacy Framework(FLM)," R. Miller (ed.), *Transforming the Future: Anticipating in the 21st Century*, Taylor&Francis
- Rosen, R. (2012). *Anticipatory systems. Philosophical, mathemat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2nd ed.). New York: Springer.
- Acemoglu, D. and S. Johnson. (2023). *Power and Progress: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London: Basic Books.
- Chang, K. S.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New York: Routledge.
- Durkheim, E. (1984[189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W. D. Halls, New York: The Free Press.

- Goldin, C. and L. F. Katz. (2008).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Heckman, J. J. (2006). Skill formation and 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disadvantaged children. *Science*, 312(5782), 1900-1902.
- Kim, D. (1990). The Transformation of Familism in Modern Korean Society: From Cooperation to Competition. *International Sociology*, 5(4), 409-425.
- Marx, K. (1973). *Grundrisse*. Penguin Classics.
- Parrington, John. (2021). *Mind Shift: How Culture Transformed Human Br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or, Juliet B. (1993).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 Bijker, W. E. (2001). *Understanding technological culture through a constructivist view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lerwall, C. (2014). Enter the robot journalist: Users' perceptions of automated content. *Journalism Practice*, 8(5), 519-531.
- Eshhet-Alkali, Y., & Amichal-Hamburger, Y. (2004). Experiments in digital literacy. *Cyberpsychology & Behavior*, 7(4). 421-429.
- Fischer, C. S. (2023). *America calling: A social history of the telephone to 1940*.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lster, P. (1997). *Digital literacy*. New York: John Wiley & Sons.
- Kandlhofer, M., Steinbauer, G., Hirschmugl-Gaisch, S., & Huber, P. (2016, Octob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er science in education: From kindergarten to university. In *Proceedings of the 2016 IEEE Frontiers in Education Conference* (pp. 1-9). IEEE.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Long, D., & Magerko, B. (2020, April). What is AI literacy? Competences and design considerations. In *Proceeding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16).
- McLuhan, M. (199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Cambridge, MA: MIT press.
- Oxford Insights (2022).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22*. Retrieved 8/12/23 from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8b2e92c1e5b6c828058484e/t/639b495cc6b59c620c3ecde5/1671121299433/Government_AI_Readiness_2022_FV.pdf
- Rau, P. L. P., Gao, Q., & Ding, Y. (2008).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timacy and lurking in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6), 2757-2770.
- Schramm, W., & Atwood, E. (1981). *Circulation of news in the Third World: A study of Asia*.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 Tichenor, P. J., Donohue, G. A., &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2), 159-170.
- Wang, P. (2019). On def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10(2), 1-37.
- UN Archives Geneva. *League of Nations: Intellectual Cooperation*. <https://libraryresources.unog.ch/lonintellectualcooperation/ICIC> 에서 2023.08.15 인출.
- UN Office at Geneva.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https://www.ungeneva.org/en/about/league-of-nations/covenant> 에서 2023.08.15. 인출.

유네스코 '미래담론' 연구

기획 및 발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한경구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집필진

전상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두환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범순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한 준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남기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백영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교 열 김보람

디자인 수카디자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 화 02-6958-4100

전자우편 ap.center@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간행물 등록번호

IR-2023-RR-3

비매품/무료



9 791190 615501
ISBN 979-11-90615-50-1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